

轉換期の南北韓關係：現況と展望

第6回 國內學術會議 發表論文集

1992. 12. 28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1990년대 동아시아는 냉전이후의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내 국가간 역학관계가 재정립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脫冷戰過程을 겪고 있다.

1992년 10월 제14차 中國共產黨大會 결과로 黨指導部와 國務院이 개편되었고, '92년 11월 미국은 클린턴대통령의 당선으로 12년만에 民主黨이 집권하게 되었으며, 일본과 러시아에서는 개각이 단행되었다. 한편, 지난 12월에는 한국에서도 새대통령이 선출되어 新行政府 出帆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북한의 총리 경질 및 당지도부의 개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東北亞 國家들의 리더십이 거의 모두 교체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

따라서 國際秩序 再編과 域內國家들의 리더십 교체가 맞물림으로써 '93년의 東北亞情勢는 어느 때 보다도 커다란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 연구원은 이러한 轉換期的 時點에서의 동북아정세와 북한의 대남전략, 남북관계를 分析·展望하고 그 토대위에서 앞으로의 課題를 導出하고자 1992년 12월 28일 「轉換期的 南北韓關係：現況과 展望」이라는 주제로 第6回 國內學術會議를 개최한 바 있다.

이 報告書는 금번 國內學術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토론내용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일부 논문은 그후 저자가 토론내용을 감안하여 다시 손질하였으며, 토론내용도 책으로 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편집하였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앞으로의 남북관계 發展方向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周邊情勢 및 南北關係를 전망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參考資料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3. 1.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조정실

目 次

序 文

I. 開會辭	李秉龍	1
II. 會 議：轉換期の 南北韓關係：現況과 展望		3
1. 美國 新政府의 對韓半島政策 展望	吉炆宇	5
2. 北韓의 對南戰略 分析과 展望	許文寧	31
3. 南北韓 關係의 現況과 展望	朴英鎬	51
III. 討 論		66
<附 錄> 會議概要		103

開 會 辭

多事多難했던 壬申年이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지난 한해에 情勢 추이를 분석·정리하고 來年の 정세를 展望하기 위한 第6回 國內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司會者·討論者로 참여해 주신 학자·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公私多忙 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학술회의에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歡迎하며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舊蘇聯의 붕괴 이후 世界秩序가 再編되는 과정에서 동북아지역에서도 4強間의 力學關係가 再調整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東北亞國家들 모두 리더십의 交替過程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0월의 中國共產黨 14차대회 결과로 黨指導부와 國務院이 개편되고, 11월초 美國 대통령선거에서 클린턴의 당선으로 12년만에 民主黨이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日本과 러시아도 改閣을 하였고 북한에서도 12월초에 黨指導부와 政務院을 개편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우리도 새대통령을 선출하여 新行政府出帆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이렇듯 國際秩序 再編과 域內國家들의 리더십 교체가 맞물림으로써 내년의 東北亞情勢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커다란 변화를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轉換期的 時點을 맞이하여 저희 研究院은 미국의 東北亞 및 韓半島政策이 동북아정세에 지대한 影響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하에 미국 新行政府의 對韓半島政策을 展望함과 동시에 북한의 대남전략, 남북관계를 분석·전망하고 그 토대 위에서 향후 統一問題

연구 및 政策代案 개발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學術會議가 올 한해를 정리하고 내년의 周邊情勢 및 南北關係를 전망하는데 있어 유익한 討論의 場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사계의 專門家 여러분께서 자유롭고 진지하게 高見을 교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저희 研究院의 研究陣들이 見解를 발표하고 평가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외부 학자·전문가들의 많은 叱正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나마 開會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1992. 12. 28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 秉 龍

會議：轉換期的 南北韓關係：現況과 展望

- 司 會：李 容 弼 (서울大 教授)

- 主題發表：吉 烜 宇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美國 新政府의 對韓半島政策 展望”
許 文 寧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北韓의 對南戰略 分析과 展望”
朴 英 鎬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南北韓 關係의 現況과 展望”

빈 면

美國 新行政府의 對韓半島政策 展望

吉 姪 宇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 목 차 >

I. 서 론

II. 미 신행정부의 대한반도정

책: 주요 사안별 변화 展望

1. 주한미군의 철수

- 규모와 시기 재조정

2. 방위비 분담

3. 미·북한 관계

4. 경제·통상관계

5. 아·태지역 多者間 안보협 의체

III. 결 론

1. 미 신행정부의 대한반도정 책 要約

2. 한국정부의 고려사항

I. 서 론

클린턴대통령이 이끌어 갈 미국 민주당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 그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이 선거유세 기간중에 혹은 대통령 당선 이후 본인이 직접 언급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민주당내부의 정책수립에 깊이 간여하고 있는 인사들이나 정책자문기관 등이 정책건의의 형식으로 발표한 文件들을 통해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클린턴 자신의 발언이나 기타 여러 문건에는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부분이 상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일본과 중국관련 이외에 한반도를 직접 염두에 두고 제시한 정책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선, 냉전이후시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외교적 사안에 비하여 한반도사태가 미 정책입안자들의 우선적인 관심을 유도할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클린턴의 핵심 정책입안자들 가운데 한반도문제를 주요 이슈화할 만한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이 일관된 정책 기조위에 독립된 정책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은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과거 제2차대전과 한국전쟁이후 미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이 지난 1980년대를 제외한다면 一貫性이 결여된 다분히 事態對應的(reactive)인 면이 두드러진다는 해석과도 맥이 상통한다.¹⁾

이상과 같은 이해에 근거하여 미 신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을 전망하는데 있어 현 시점에서 내릴 수 있는 暫定的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2차대전이후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이 뚜렷한 기조 없이 변화를 거듭한 점에 관해서는 Norman D. Levin and Richard L. Snider, "Korea in Post-War U.S. Security Policy," in Gerald Curtis and Sungjoo-Han eds., *The U.S.-South Korean Alliance* (New York: Lexington Books, 1983), pp. 31~64에 설명되어 있다. 아울러 Norman D. Levin, "From Politics to Policy: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n Security in a Post-Cold War, Pre-Unification, and U.S. Democratic Party Era," 외교안보연구원과 RAND 공동주최 "A New Order in Northeast Asia and Korea-U.S. Relations" 주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서울, 1992. 11. 19~20), pp. 3~4를 참고.

첫째, 미 실행정부의 한국관련 정책수립 요직에 어떠한 性向의 인물이 임명될 것인가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12년간의 공화당 집권시 소외되었던 민주당계 전문인력들이 외교 및 국방관련 부서에 대거 진출하였는바 이들이 한·미관계에 관하여 그동안 어느정도나 면밀한 연구를 계속해왔는지 회의적이다. 따라서 미국의 對韓정책에 대한 제3의 견해까지를 수용하는 인물이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국방부의 안보정책담당 차관보 및 백악관 안보보좌관실(NSC)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에 임명될 경우 미 실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 조정의 幅은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²⁾

둘째,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정책의 조정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른 정책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의 대일본, 중국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조정이 가해진다면 그 조정의 내용은 냉전시대 미국의 세계적 역할과 위상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국내적 요구 및 관련 논의가 1990년대 들어 활발히 전개되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³⁾ 클린턴 진영내에서도 각기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

2) 클린턴 대통령당선자의 정권인수팀의 외교담당에 Samuel Berger 카터행정부 당시 국무부 정책기획실 부실장, 외교담당보에 Nancy Soderberg 케네디 상원의원 보좌관이 임명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Berger씨는 백악관 안보보좌관실 부실장으로 최종 임명되었다.

3) 냉전이후시대 미국의 位相과 국제적 役割에 대한 논의는, 길정우,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미국의 對應,”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와 동북아질서」,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2-04 (1992. 10), pp. 128~34; Stanley R. Sloan, *The U.S. Role in the Post-Cold War World: Issues for a New Great Debate*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ibrary of Congress, March 1992), pp. 2~16.

으나, 孤立主義로의 回歸을 주장하는 집단⁴⁾과 1980년대 강화된 國際主義的 입장을 고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집단⁵⁾의 견해가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수립에 어느정도로 수용될 것인가에 따라 동북아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미 행정부의 동북아정책이 조정될 경우 우선적으로 변화가 나타날 부분은 대일본 및 중국정책이 될 것이나, 대한반도정책은 미국의 對中·일정책과 다른 차원에서 고려될 것이다. 즉, 미·일간 무역 불균형 심화가 미 행정부내 대일정책 담당자들 뿐 아니라 기업 및 의회, 언론계 인사들 사이에 공히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국기업의 경쟁력(competitiveness) 제고를 증시하는 클린턴 행정부의 對日정책은 우선 경제·통상분야에서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아울러 경제·통상과 안보정책을 포괄하는 總體的 외교를 강조하는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激減된 안보여건하에서 대일본 안보정책과 통상문제를 연계시키는 정책으로 구현될 가능성도 있다.

통상과 정치·군사적 사안의 연계는 미국의 대중국정책에서도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중국 最惠國待遇(MFN) 연장에 있어서 중국의 인권문제 진전상황과 대외 무기수출문제를 심각히 고려하겠

4) Patrick Buchanan, "America First—and Second, and Third," *The National Interest* (Spring 1990); Doug Bandow, "Leaving Korea," *Foreign Policy* (Winter 1989/90); Jeane J. Kirkpatrick, "A Normal Country in a Normal Time," *The National Interest* (Fall 1990).

5) Joseph S. Nye, Jr., "What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Spring 1992); Samuel P. Huntington, "America's Changing Strategic Interest," *Survival* (January/February 1991); Charles Krauthammer, "The Unipolar Moment," *Foreign Affairs: America and the World 1991/92* (1991), pp. 23~33, "Bless Our Pax Americana," *The Washington Post*, March 22, 1991.

다는 입장이 선거 유세기간중 표명된 바 있다.⁶⁾

미 실행정부의 총체적 외교정책이 교역분야에서 일본, 중국과는 달리 미국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한국에 어떻게 적용될런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셋째, 미 政府와 의회내에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데 대한 共感帶가 형성되어 있다. 나아가, 정책이 재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質的 변화가 아니라 정책추진의 속도와 정책의 내용에 부분적 수정을 가하는 정도의 변화가 있으리라는 예측이 보다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 철수의 규모와 속도, 주한미군 주둔경비와 관련된 한국정부의 방위분담액 규모 등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잠정적 결론에는 일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즉, 냉전이후시대 舊소련과 같은 미국의 主敵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문제 해결을 주된 선거이슈로 부각시켜 대통령에 당선된 클린턴이 세계속의 미국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가운데 미국의 세계 전략과 동아시아정책도 변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대한반도정책도 불가피하게 변화될 것이다. 아울러 대외정책을 수립할 주요 직책에 “변화와 더불어 연속성을 추구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 인물을 기용할 것”이라는 클린턴 자신의 발언⁷⁾에 미루어 볼 때 정책의 지속과 함께 변화 또한 예상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6) 클린턴후보의 로스엔젤레스 World Affairs Council주최 오찬연설, August 13, 1992; 민주당 政綱 (The Democratic Platform), *Congressional Quarterly*, vol. 50 (July 4, 1992), p. 66.

7) 대통령 당선후 첫 기자회견,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12, 1992.

다른 한편, 동아시아정책에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파장은 일본과 중국에 비하여 높지 않을 것인 바, 대한반도정책의 변화는 부시 공화당 행정부 당시 기왕에 논의되고 있었던 사안들에서 우선적으로 발견될 것이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론은 적어도 현재까지 클린턴 진영으로부터 발표된 文件에 한반도사태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다소 상충되는 면을 보이는 잠정적 결론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의 전반적 조정과정에서 대동아시아정책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대한반도정책에도 불가피하게 파급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클린턴 대통령 취임이후 단시일내에는 변화의 파장이 역내 여타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진다.

미 신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 변화의 幅을 가늠하기 위하여 예측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할 경우, 기왕에 표명된 클린턴 진영의 정책 보고서 가운데 한반도 관련부분을 추출하여 검증하는 방법보다는 한·미, 미·북한관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기존의 사안들, 또는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을 중심으로 각종 발언 및 문건들을 참고함으로써 미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이 보다 적실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주한미군의 규모 및 시기 조정,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분담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등 방위비 분담문제, 미 신행정부의 對韓 경제·통상관계 등이 한·미간의 당면 문제라면, 미·북한간의 관계 개선 가능성 및 미국의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 논의 등은 한·미관계의 전개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II. 미 신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 주요 사안별 변화 展望

1. 주한미군의 철수 - 규모와 시기 재조정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의 대한반도 인식은 한반도에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북한이 한국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한, 한국에 미군을 유지해야 한다”⁸⁾는 것이며, 클린턴 자신도 “한반도를 냉전종식후 새로운 위협요소인 핵확산 위협이 있는 주요 긴장지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⁹⁾ 아울러 클린턴 후보의 선거 캠페인을 위한 자료에도 해외주둔 미군의 재조정 문제와 관련 “북한이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에 위협이 되는 한, 동북아시아에 미군을 주둔한다”고 언급되어 있다.¹⁰⁾ 대통령 당선후 노태우 대통령과 가진 지난 11월 13일의 전화통화에서도 클린턴 당선자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미군사력이 역내에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주한미군이 필요로 하는 한 계속 주둔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¹¹⁾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에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존재가 위협을 억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일 뿐, 현 수준의 미군사력이 한반도내에 계속 유지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단지, 미 신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이

8) 민주당 政綱, op. cit., p. 66.

9) 뉴욕 Foreign Policy Council주최 오찬연설, April 1, 1992.

10) Bill Clinton and Al Gore, *Putting People First: How We Can All Change America* (New York: Times Books, 1992), p. 133.

11) 「중앙일보」, 1992. 11. 13.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정할 수 있는 것은 해외주둔 미군규모의 재조정이 냉전이후시대 뚜렷한 군사적 위협이不在하는 상황에서 미 국내경제 활성화와 제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財源 증당의 목적에서 추진될 미 국방비 감축조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미 공화당 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남북한 상호사찰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1990년 4월 Nunn-Warner 보고서에 근거한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에 따라 추진되어온 단계적 감군계획의 제2단계(1993~95년)시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국내 유수 연구기관의 정책보고서와 클린턴 정권인수팀의 Berger 외교보좌관의 정책메모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을 현 수준이상으로 감축할 것을 건의하고는 있으나,¹²⁾ 前者의 경우 장기적으로 일본의 재무장이 야기할 역내 불안과 한국의 통일과정에서 초래될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현 수준에서 15%정도의 감축을 건의하고 있는 한편, 後者の 문건에서는 삭감의 규모와 대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클린턴의 선거캠페인 중 유럽주둔 미군의 수준을 7만 5천 내지 10만명 수준으로까지 감축할 것을 공약하고 있으나,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 동북아시아역내 미군주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¹³⁾ 아울러 신행 정부를 위한 연구기관의 정책건의들에서도 북한의 위협, 아·태지역

12) James A. Winnefeld, Jonathan D. Pollack et al., *A New Strategy and Fewer Forces: The Pacific Dimension*, RAND R-4089/2-USDP (Santa Monica, CA: 1992), p. 34, pp. 60~62; Samuel Berger의 정책메모는 「중앙일보」 1992. 11. 22.

13) Clinton & Gore, op. cit., p. 133.

에서 역사적 敵對세력인 중국과 일본의 강대국화에 따른 불안 상존, 남북한관계 진전과정에서의 혼란 등을 이유로, 동 지역에 배치된 현재 12만 5천명 수준의 미군병력의 점진적 철수를 주장하면서도, 일정수준의 주일미군과 한국에서의 미군의 전투태세 유지를 옹호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⁴⁾

이상에서 언급된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 지역에 배치된 미군의 규모조정에 대한 논의는 역내 전진배치된 미군의 존재가 한반도의 긴장사태 뿐 아니라 일본의 재무장과 역내 역할증대 및 중국의 군사현대화에 따른 역내 불안까지 고려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야기될 혼란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리라는 폭넓은 인식에 근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減軍일정과 규모는 미국의 장기적 전략구상에 따라 추진될 것이나, 그 속도의 緩急과 규모의 결정에는 남북한 관계진전에 따른 지역내 긴장완화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방위비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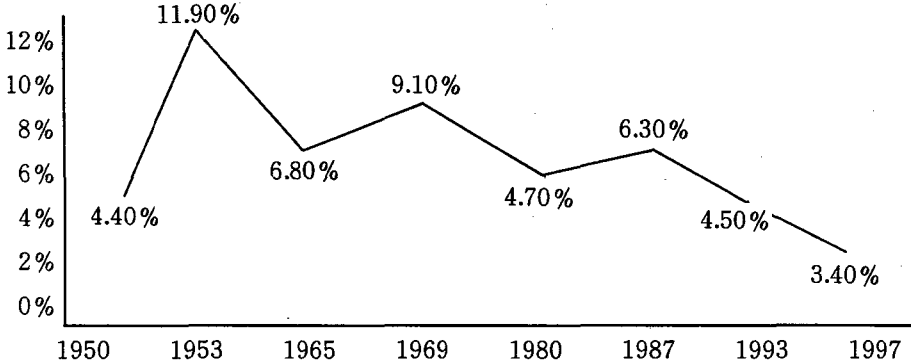
한·미 양국간의 방위비 분담문제는 두가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선, 쌍무관계에 있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유지 비용에 대한 한국정부의 부담율을 증가시키라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

14)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National Commission, *Changing Our Ways: America and the New World* (Washington, D.C.: 1992), pp. 60~61; Don Snider, "U.S. Military Presence Oversea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Agenda '93: CSIS Policy Action Papers* (Washington, D.C.: November 1992), pp. 15~16.

가 있어 왔다. 다른 한편, 미 행정부는 세계각지의 지역분쟁에 대한 개입도가 점차 높아지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가운데 미국이 선도하는 분쟁해결의 경우, 재정적, 인적, 물적 자원공여를 통한 한국의 참여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 특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방위비 분담확대 요구는 부시 행정부하에서도 지속되어 왔는 바, 부시 행정부의 향후 5년간 국방비 감축 청사진에 따른 삭감규모보다 6백억달러가 많은 1천억달러 이상을 1997년까지 삭감한다는 클린턴의 구상은 기존의 방위분담 요구가 보다 강도있게 개진되리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표 1 참조).¹⁵⁾

<표 1> GNP 대비 미국의 국방예산



출처: Dick Cheney 미 국방장관, 상원 군사위원회 1993년 국방예산관련 청문회 보고 (1992. 1. 31)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유지비용과 관련, 1992년에 1억 5천만 달러, 1993년에는 2억 2천만달러의 방위비를 한국정부가 증액분담

15) Clinton & Gore, op. cit., pp. 133~34.

기로 합의하였으며, 1995년까지 원화발생 비용의 3분의 1 수준까지 늘려간다는 데 이미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 공화당 행정부와 의 합의사항이 클린턴 신행정부의 대한정책에서도 변화없이 이행되리라 고 기대할 수 만은 없다. 이와 같은 예측은 1992년도 미 의회가 '93회계년도 국방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노정된 분위기를 탐지함으로써도 가능하다. 미 의회는 1993년도 국방歲出법안(H.R. 5504) 심의에서 한국을 포함하여 미군이 주둔하는 여타 국가들에서의 미군 주둔경비와 외국인 고용경비를 삭감하여 입법화하였으며(P.L.102-396), 1993년도 국방授權법안(H.R.5006) 심의과정에서도 국방예산 삭감과 해외주둔 미군규모 축소를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1994년까지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대부분을 감당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하 양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클린턴 신행정부가 미국의 세계전략 구상에서 유엔 및 국제기구의 역할강화를 통한 集團安保(collective security)를 강력히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한국의 참여 요구는 강도있게 제기되리라 예상된다(표 2 참조).

한걸음 더 나아가 클린턴은 유엔을 통한 집단안보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엔에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迅速配置軍(U.N. Rapid Deployment Force)을 신설하고 침략행위를 억제하는 역할 뿐 아니라 人道主義的 원조와 테러행위 및 마약거래 억제 임무까지를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¹⁶⁾ 카네기재단의 정책건의서에서도 유엔의 확대된 역할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미국을 비롯

16) 클린턴 당선자가 주유엔대사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진보성향의 Madeleine K. Albright 교수를 임명한 것은 유엔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 2> 유엔 평화유지활동

(1992년 4월 현재)

지 역	파견 연도	연 경비 (백만달러)	파견 규모
Israel	1948	31	300
India/Pakistan	1949	5	39
Cyprus	1964	31	2,200
Golan Heights	1974	43	1,330
Lebanon	1978	157	5,800
Iraq/Kuwait	1991	67	500
Angola	1991	110	840
El Salvador	1991	59	1,150
Western Sahara	1991	59	375
Yugoslavia	1992	607	14,370
Cambodia	1992	1,900	15-20,000
Somalia	1992	23	550

출처: Carnegie Endowment, Changing Our Ways (November 1992)

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상당부분 부담하고 있는 평화유지 활동 경비를 유엔 일반예산에서 충당하고, 여타 일반회원국에게도 일반예산과 같은 방식(formula)에 따라 부담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표 3 참조).¹⁷⁾

17) Carnegie Endowment, op. cit., pp. 64~66.

<표 3> 유엔 (평화유지활동) 재정분담 (1992년)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일반예산 기여	평화유지활동 기여
U.S.	298.6 (25.00%)	810.8 (30.38%)
Japan	122.6 (12.45)	332.3 (12.45)
Russian Fed.	92.7 (9.41)	305.1 (11.43)
Germany	87.9 (8.93)	238.3 (8.93)
France	59.1 (6.00)	194.6 (7.29)
UK	49.4 (5.02)	162.8 (6.10)
Canada	30.7 (3.11)	83.0 (3.11)
Spain	19.5 (1.98)	52.9 (1.98)
Brazil	15.7 (1.59)	42.4 (1.59)
Australia	14.9 (1.51)	40.3 (1.51)

* 괄호 안은 전체 유엔예산 및 평화유지활동 경비중 차지하는 비율
출처: Carnegie Endowment, Changing Our Ways (November 1992)

아울러, 같은 보고서는 유엔내 특별재원을 마련하여 긴급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전문인력을 훈련, 양성하여 지역분쟁에 대한 사전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 신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방위분담증액 요구는 쌍무 관계에서 뿐 아니라 집단안보에 의존한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강도있게 제기될 것이다.

3. 미·북한 관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미국의 우방인 한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상존하는 북한이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전체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더우기

1991년 봄이래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의혹이 점증됨에 따라 미 행정부의 대북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에 대한 미 행정부의 관심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함께 미사일 수출, 국제테러행위 지원, 전쟁실종자(MIA)문제, 북한내 인권상황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바,¹⁸⁾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미·북한 양국간의 관계개선에 「先決條件」(preconditions)이라고 명기된 것은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사안들에 진전이 없을 경우 양국관계가 개선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표명된 미 행정부 관리들의 일관된 주장일 뿐이다.

1988년 12월 미·북한간에 北京에서의 참사관급 회담이 시작된 이래 1992년 12월 23일까지 29회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특히 1992년 초 「남북한간의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된 이래 미·북한은 현재까지 열한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이와 더불어 1992년 1월 22일 뉴욕시에서 미국무부 아놀드 칸터 차관과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 김용순간의 고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는 바, 미 행정부는 당시 회담을 북한에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고 미·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¹⁹⁾

정례적인 고위급 접촉을 포함한 미·북한 관계개선을 지향하는 북한의 적극적 공세에도 불구하고 (학계나 언론계가 아닌) 미 행정

18) Norman D. Levin, op. cit. (1992), p. 4; Young C. Kim,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Random Notes," 민족통일연구원주최 "한반도 주변4국의 대북한정책" 주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pp. 3~4.

19) Arnold Kanter 미 국무차관, "North Korea, Nuclear Proliferation, and U.S. Policy: Collective Engagement in a New Era,"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증언, February 6, 1992, pp. 13~15.

부가 적어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은, 기왕에 제시해 놓은 양국관계 개선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한관계 진전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비중있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북한에 대한 미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체제와 남북한간의 상호사찰체제가 실현되어 북한의 핵관련 활동들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해소되면, 미국은 定例的인 정책차원의 대화(regular policy-level dialogue)에 임하고 보다 正常的인 미·북한관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²⁰⁾는 것인 바, 미 신행정부의 대북한 입장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리라고 예상되지는 않는다. 북한의 핵개발문제가 단순히 한반도의 평화에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고 동북아지역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공감대가 미국 정책입안자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의 기본 외교노선에서 핵 및 미사일 등의 擴散(proliferation)이 중요사안으로 취급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클린턴 민주당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문제 뿐만 아니라 미사일 수출 및 생화학무기 備蓄 및 수출 등에 대해서 공화당 행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²¹⁾ 클린턴 행정부의 이와 같은 입장은 국제원자력

20) Richard H. Solomon, “From Cold War to Hot Economies: America and Asian Security in an Era of Geoeconomics,” Pacific Rim Forum 연설문 (San Diego, CA: 1992. 5. 15), p. 5; 이와 같은 입장은 클린턴 당선후 미 고위관리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William Clark, Jr.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Asia Society 연설, “Challenges of Change, Challenges of Continuity: U.S. Policy and Northeast Asia in a New Era,” (Houston, TX: December 3, 1992), p. 49.

21) 민주당 政綱, op. cit., p. 66; Peter D. Zimmerman, “Proliferation of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CSIS, op. cit., pp. 13~14; Leonard S. Spector, “Repentant Nuclear Proliferants,” Foreign Policy (Fall 1992), pp. 34~37.

기구의 사찰강화, 국제적 제재조치 不辭의지 표명,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에의 참여 촉구 및 규약 위반국가에 대한 제재강화 주장²²⁾ 등에 비추어 볼 때도 충분히 예상되는 바이다.

핵 및 미사일 확산문제와 더불어 인권문제는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한관계에 있어 애초부터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지는 아니할 것이나 정책 기조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은 캠페인기간 중 냉전이후시대 미국 국가안보의 기본원칙은 미국이 추구하는 價値에 근거하여 세계질서를 형성해가는 것이라고 천명하고 이를 위하여 국내외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도력 재확립,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군사력 유지 및 민주주의의 확산과 공고화를 주장하였다.²³⁾ 아울러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하여 인권문제를 중시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아시아의 상황과 관련, 중국의 인권문제와 통상문제의 연계와 더불어 중국, 베트남과 여타 지역에 미국의 민주주의 이념을 전파시킬 라디오 프로그램(Radio Free Asia) 신설을 공약하였다.²⁴⁾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의 일부분으로서 중시되는 인권 문제가 대북한관계에 있어 어느 시점에, 어떠한 강도를 가지고 전달될는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의 조짐을 보이고 미사일(기술) 확산문제에서 또한 북한측의 입장변화가 감지된다면 북한의 인권문제가 미·북한관계에 있어 또다른 중요사

22) Clinton & Gore, op. cit., p. 136.

23) Ibid., pp. 129~30.

24) Ibid., p. 139; Will Marshall and Martin Schram eds., *Mandate for Change* (New York: Berkley Books, 1993), pp. 317-18; 클린턴후보의 “Democracy in America” 주제 위스콘신대학 연설, October 1, 1992.

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예상할 수 있다.

한·미·북한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1993년 2월로 예상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 영변소재 5MW 원자로의 핵연료 표본추출 검사결과에 따라 미 행정부의 기존입장에도 변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미 신행정부가 취하게 될 정책대안과 관련, 한·미·북한간의三者회담의 의미를 주장하는 미국내 일부 북한연구가들의 견해가 새로운 시각에서 주목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²⁵⁾

4. 경제 통상관계

한·미관계에 있어 군사·안보분야에서 보다 단시일내 정책변화의 파장이 느껴지게 될 분야가 경제·통상부문이다. 미 신행정부가 국내경제 활성화와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음은 앞서 설명하였는 바, 구체적인 정책내용은 미국의 경제적 지도력과 군사적 우위 유지를 포괄하는 總體的 외교(comprehensive diplomacy)의 구현이라는 맥락에서 표출될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 기조위에 公正貿易(fair trade)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상업외교(commercial diplomacy)의 형태로서 개진될 미 신행정부의 대외 통상정책상의 주된 관심은 동아시아국가들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1992년도 500억달러 흑자 예상)과 중국(1992년도 180억달러 흑자 예상)등에 집중될 것이다.²⁶⁾ 그러나 한·미간에

25) 카네기재단의 Selig Harrison, 미 의회 입법조사국(CRS)의 Larry Niksch와 필자와의 대화, 1992. 12. 8; William J. Taylor, Jr., "Korean Unification and Nuclear Inspections," CSIS, op. cit., pp. 73~74.

26) Marshall & Schram eds., op. cit., pp. 291~93.

기본적으로 무역불균형이 해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 의회 및 업계에 의하여 여전히 무역관행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한국의 농산물, 통신, 知的財産權, 금융 등의 분야에 대한 쌍무협상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GATT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타결과도 연계되어 있는 한국의 쌀시장 개방 문제가 현재까지는 다자간 협상의 의제로 남아있지만,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 한·미 양국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재부상될 가능성이 있다.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의 안보와 통상문제 (적어도 意識上의) 연계정책은 한국의 완전한 시장개방을 상정한 (미·일간의 SII와 유사한) 「구조조정협약」과 같은 구상을 정책대안으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²⁷⁾ 그러나 이와 같은 구조조정 문제는 양국간 무역균형이 유지되고 여타 분야에서 갈등이 고조되지 않는다면 건박하게 논의될 사안은 아니라고 예상되며, 미·일간의 「구조조정협약」에 대하여 아직까지 미국내에서 완전히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내 한·미간에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과의 무역불균형 심화로 인하여 1992년도 미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온 통상법 수퍼301조의 부활문제와 관련, 클린턴은 선거캠페인時 이를 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²⁸⁾ 현행 미 통상법에 규정된 301조의 적용에 있어 대통령의 직권에 의한 免除조치

27) Robert G. Sutter, *Korea—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ibrary of Congress, November 1992) 및 1992. 12. 8. 필자와의 대화.

28) Clinton & Gore, op. cit., p. 156.

(waiver)의 폭을 줄여감으로써 강도있는 통상정책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호소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⁹⁾ 다만, 미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클린턴 신행정부로서는 수퍼301조의 부활이 의회내에서 심각히 논의될 경우, 부시행정부와는 달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人權과 통상문제 연계 차원에서 미 신행정부가 취할 정책과 관련 예상되는 것은,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구 버어마) 등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묵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클린턴 행정부가 이들 국가들과 교역 및 투자관계를 확대해 가고 있는 한국 등에게 미국의 입장 지지를 강도있게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³⁰⁾

남북한 관계진전과 관련하여 북한의 핵문제에 해결조짐이 보이고 남북한간 경제협력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남북한간 경제교류 및 협력시 불가피하게 간여하게 될 미 업체, 기업인들 및 상품들을 미 국내법에 의하여 규제, 처벌하는데 있어 한계에 직면하게 될 미 신행정부로서는 대북한 경제교류 규제를 완화,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29) 미 의회 입법조사국(CRS)의 미통상정책 연구관 William Cooper와 필자의 대화, 1992. 12. 10.

30) Larry A. Niksch, "Keeping U.S., East Asia Within Arm's Length,"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Weekly* (November 9, 1992); 미얀마 등의 인권침해 사태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Daniel Patrick Moynihan 상원의원이 통상문제를 총괄하는 상원 재무위원장이 될 경우 인권과 통상문제의 연계는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5. 아·태지역 多者間 안보협의체

한·미간 쌍무관계와 직접 연관된 문제는 아니지만 한반도 통일 환경과 관련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아·태지역 안보협의체 논의이다. 지역내 집단안전보장을 위한 협의체나 기구에 대한 미 행정부의 구상은 유럽지역에서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강화시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나, 아·태지역의 안보협의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물론 아·태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의체에 대한 미 행정부 구상의 일환으로 1991년 11월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Foreign Affairs지 기고에서 한반도 주변의 안보논의를 염두에 둔 「2+4 회담」을 제안한 적은 있으나,³¹⁾ 이후 미 행정부내에서의 후속 논의는 없었다. 다만 미국은 동아·태지역, 특히 동북아시아에서의 小地域的 대화(sub-regional dialogue)의 필요성을 기존 협력체제에 補完的 의미를 가진다는 차원에서 언급해 왔는 바, 이와 관련 역내 안보 및 경제·통상문제 논의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 구상에서 미국이 배제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 않음을 수시로 밝히고 있다.³²⁾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에 대한 미국의 고려는 냉전이후 시대 소련의 실질적 위협이 소멸된 상황에서 미국 또한 냉전시대와 같이 재정적 부담을 안고 군사적 前進配置戰略을 고수할 수는 없다는 인식하에 미·러의 상대적 퇴조가 역내 세력공백을 야기하여 불안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전략적 계산에 기인하

31) James A. Baker III, "America in Asia: Emerging Architecture for a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Winter 1991/92), p. 13.

32) William Clark, Jr. 차관보 연설, op. cit., pp. 51~52.

고 있다고 판단된다. 미 실행정부의 대외정책은 군사력면에서 타국의 도전을 받지않는 강대국(leading military power)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되, 유럽 및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역할을 재조정하는 가운데 전진배치된 미군을 점진적으로 감축시킨다는 기조 위에 수립될 것이다. 냉전이후시대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질서하에서 미국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진배치전략을 조정해 가면서 유연한 迅速配置軍전략으로 보완하고, 예상치 않은 국지분쟁 해결에 대처하기 위한 선진제국들과의 공동노력을 추구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의지는 실행정부 출범이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안보협력회의와는 달리 아·태지역에서 유사한 안보협의체가 형성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미 실행정부는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논의사안으로서 북한의 핵개발 억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역내 일부국가들의 미사일(기술) 수출, 생화학무기 생산 및 비축문제, 非전통적 위협요인으로서의 환경, 難民, 마약 문제들까지를 상정한 대화의 場 형성 의욕을 포기하지 않은 채 미국의 주도적 노력보다는 역내 국가들의 제안을 관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미 행정부는 적어도 아·태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한국, 일본, 호주, 태국 등과의 쌍무조약에 의한 안보협력관계에 우선을 두고 다자간 안보구상의 효과가 이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전략적 계산은 고수할 것이다. 다만, 역내국가들로부터 이미 아·태지역 다자간 안보논의를 위한 제안들이 산발적으로 표출된 바 있는 상황에서 아·태경제협력 각료회의(APEC)가 경제·통상문제 뿐 아니라 정치·안보문제 까지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미국내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된다면 미 실행정부는 1993년 11월 미

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제5차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Ⅲ. 결 론

1. 미 신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 要約

클린턴 미대통령 당선자는 신행정부의 외교정책상 우선과제로서 미 국방력을 최강상태로 유지하면서 수년간에 걸쳐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문제, 핵 보유국의 핵무기 감축과 대량살상무기의 擴散방지 문제, 中東 평화회의의 지속적 추진, 주요 경제대국과의 협조를 통한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 추구를 설정하였다.³³⁾

미 신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국내정책과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추진될 것이며, 특히 군사·안보정책과 경제·통상정책이 완전히 구분되어 수행될 수 없는 것이라는 클린턴 및 주변 민주당 정책입안자들의 인식에 근거할 때, 미국의 외교정책은 總體的이고 包括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분쟁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익보호를 위한 選別的(selective) 개입을 통해 미 군사력의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개입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集團的(collective) 노력을 선호할 것이다. 이와 같은 미 신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방예산 감축계획과 관련하여 쌍무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선별적 개입을 보장하고 유지할 비용분담 요구와 局地분쟁 및 미국이 선도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참여와 기여 촉구의 형

33)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의 기자회견,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12, 1992.

태로 전개될 것이다.

통상정책에 있어서는 자유무역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GATT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한 다자간 교역규범을 정착시킴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지도력을 견지하는 한편, 캐나다, 멕시코를 포괄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국내 고용과 환경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를 통한 고용력 증대를 강조하는 미 실행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미 상품의 대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容認 수준은 부시행정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이와 관련, 상원 11명, 하원 110명이 새롭게 진출하는 제103회기 미 의회에서는 지역구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주의 입법이 산발적으로 상정될 것인 바,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일본과 중국이 비난의 주요 표적이 될 것이다. 의사진행과 법안심의에 있어서 의회 지도부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될 미 의회에서 이와 같은 보호무역주의 입법추세가 강화되고 정치·안보의 연계문제가 논의될 경우, 미·일간 무역불균형과 주일미군의 규모 조정, 대중국관련 인권문제와 最惠國待遇 연장문제들이 얽혀 다양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 정책에서 의회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미 실행정부로서는 행정부의 기본 외교노선 및 원칙론과 크게 상충되지 않는 이상과 같은 미 의회에서의 논의를 간과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 실행정부가 의회의 분위기를 다분히 반영한 대외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은 공화당 행정부 당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한반도와 관련한 미국의 國益의 근거는 한반도를 주변 강국들의 霸權的 영향력 행사를 억제하고 미국의 역내 군사·경제적 개입의 보루로 활용하며,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확산, 정착한다는 데 두어져 왔으며,³⁴⁾ 이와 같은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상정할 때 이상에서 언급한 미 신행정부의 대일본 및 중국정책의 조정이 대한정책에 큰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국익을 규정하는데 과거와 다른 새로운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바, 미국의 경제적 입지 강화, 상호 협조적인 국제체제 확립, 핵, 미사일 및 기타 첨단무기의 확산 통제라는 고려사항들이 대한반도정책 구상에도 감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개발과 한국의 경제성장 및 외교역량의 확대에 따라 한반도가 지역적 차원을 벗어나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됨으로써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정책수립에 있어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내에서 한반도문제 특히 대북한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남북한관계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음이 주목된다.³⁵⁾

34) Norman D. Levin, op. cit. (1992), pp. 13~14.

35) Selig S. Harrison, "A Chance for Detente in Korea," *World Policy Journal* (Fall 1991); Alan D. Romberg, "An American Approach to Security in East Asia,"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 "The Trilateral Relationship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주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서울, 1992. 6. 1 2); Doug Bandow, "Unfreezing Korea," *The National Interest* (Fall 1991); William Taylor, Jr., *Reflections on President Kim Il Sung*, mimeo (August 1992).

미 실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이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정책의 재조정과정에서 변화될 것임은 이미 언급하였거니와, 주한미군의 位相과 방위비분담문제 및 경제·통상문제 등에서의 정책 방향은 현 시점에서 상당 부분 예측이 가능하다. 아울러 미·북한관계의 변화 방향과 정도가 한국정부의 대북한정책, 남북대화의 진전여부, 북한의 입장 및 태도 변화여부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도 예상할 수 있다.

2. 한국정부의 고려사항

어느 정도 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미 실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한미군의 규모와 철수시기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방위비분담 규모와 연관되어 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미 의회에서는 주한미군 유지경비에 대한 한국의 분담 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방위분담 규모³⁶⁾가 거론되고 있음이 주목되어야 하며, 한국정부는 한국이 주장하는 적정 방위비분담액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³⁷⁾

36) 1995년 까지 미군 봉급을 제외한 주일미군 유지비의 73%수준 까지 일본정부가 부담하기로 미·일간 합의되어 있다.

37) 1992년 12월 8일 미 의회 입법조사국(CRS) Larry Nicksch 연구관과 필자와의 대화에서 Nicksch박사는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의 유지경비와 같은 규모의 미군을 미本土에 상주시킬 경우 소요 경비를 비교하는 연구가 현재 진행 중임을 알려준 바 있다.

둘째,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결정할 기준에 대한 국내적 논의가 있어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외적인 名分을 설정해야 한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선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재정적, 인적 공여와 유엔내 평화유지활동 경비를 충당할 별도의 재원 확보를 추구할 경우 한국이 부담해야 할 몫에 대한 엄중한 비교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시장개방 일정 豫示와 엄격한 적용, 대외통상정책 결정의 透明度 제고를 통해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는 公正한 무역 관행국으로서의 긍정적 이미지를 美 朝野에 정착시켜야 한다.³⁸⁾

넷째, 동북아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이 한국만의 일방적 구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및 일본 등의 구상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함께³⁹⁾ 새로이 국교를 수립한 중국 및 러시아의 입장도 고려하여 다자간 협의체의 형태와 논의 사안들에 대한 한국측의 구체적 입장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북한관계와 관련, 미 국내 학계, 의회 및 언론계에서의 대한반도정책 논의가 한국의 대북한관계 논의와 정책노선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왔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미 실행 정부의 정책수립 방향과 내용 결정에 중요한 準據로서 활용되어야 할 한국정부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38) 한국의 신정부는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적극 대처하고, 公正무역관행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일보」, 1992. 12. 26.

39) 미야자와 일본총리의 私的 자문기관인 「21세기의 아시아, 태평양과 일본을 생각하는 간담회」는 1992년 12월 25일 아·태정책에 관한 정책보고서에서 “아시아형 유럽안보협력회의” 구현을 위해 일본이 추구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세계일보」, 1992. 12. 27.

北韓의 對南戰略 分析과 展望

許 文 寧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 목 차 >

- | | |
|---------------------------------|-----------------------|
| I. 序 論 | 2. 韓國狀況 變化 |
| II. 北韓의 對南戰略 特徵 | 3. 北韓狀況 變化 |
| 1.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과 「통일전선」 사업 | IV. 1993년 北韓의 對南戰略 展望 |
| 2. 共産化 統一을 위한 僞裝 平和 및 顛覆의 二重戰略 | 1. 네가지 시나리오 |
| III. 北韓의 對南戰略變化 要因 | 2. 1993년 北韓 對南戰略의 方向 |
| 1. 國際環境 變化 | 3. 1993년 北韓 對南戰略의 내용 |

I. 序 論

1980년대 말 이후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변동, 비동맹국가들의 탈이데올로기·실용주의화 등으로 인하여 북한은 「국제적 혁명역량과의 연대성 강화」를 위한 활동에 있어 난관을 겪고 있다. 이에 북한은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2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바, 한국의 민주화과정에서 파생되는 정치·사회적

불안을 이용한 「통일전선전술」과, 8차례의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및 3건의 「부속합의서」에 합의하는 평화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내년도 북한의 대남전략을 전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그동안 북한이 구사해 온 대남전략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1992년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 분석을 토대로 1993년 북한이 추진할 대남전략의 방향과 내용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Ⅱ.北韓의 對南戰略 特徵

북한은 개정헌법(1992.4.9)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舊憲法 제5조)라는 句節을 削除하였으나, 黨規約 前文에는 여전히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과업 완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反美 赤化統一」전략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기에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국가 목표는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현존체제 유지)과 「조국통일」(한반도 공산화 통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체제유지 및 공산화통일이라는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해 한국에 대하여 전개하는 일련의 정책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북한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대남전략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과 통일전선사업」¹⁾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통일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 남조선 혁명, 후 조국통일」 로선을 정립한 후,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민족해방」을 위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해 투쟁할 것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위해 한국의 반공정권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타도하고 용공 또는 연공 정권을 수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²⁾

북한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전술로서 「통일전선전술」을 공식적으로 전면내세우고, 한국내 지하당 조직의 指導下에 혁명의 주력군과 보조역량을 편성, 「통일전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³⁾ 즉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을 건설, 노동자·농민중심의 혁명 주력군을 구성하고, 진보적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가, 일부 민족자본가, ‘애국’군인 등 각계 각층을 보조역량으로 규합하여 통일전선에 편입시킴으로써 反革命力量을 약화시키고 남

1) 한국사회를 분열시키며 궁극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일체의 사업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통일전선전술」외에 대남비방, 선전선동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관자본가, 반동관료들과 그들의 팃쇼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다. 이 혁명의 기본임무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내쫓고 그 식민통치를 없애며 군사 팃쇼독재를 뒤집어 엮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움으로써 남조선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룩하는데 있다.” 「김일성 저작선집 제5권」, p. 479.

3) “통일전선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혁명의 전략단계에서 그 혁명에 리해 관계를 같이 하는 여러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이 노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여 싸우며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은 정치적 연합을 말한다.”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102.

조선혁명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김일성이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을 통해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의 형성」을 강조한 이래, 「민족대단결」을 명분으로 한 통일전선전술을 더욱 重視해 왔다.⁴⁾

결국 북한은 통일전선사업을 통해 韓國內部の 矛盾을 최대한 참여화시키고 지하당 결속을 확대하며, 「반미구국통일전선」과 「반파쇼민주연합전선」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통일전선을 구축함으로써 한국사회의 혼란을 유도하려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반혁명·보수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한국 내부에서 「인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형성, 궁극적으로 공산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일전선사업을 계속 구사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共産化 統一을 위한 僞裝平和 및 顛覆의 二重戰略

북한은 통일 방법에 있어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의

4) 1990.5.24.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김일성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와 여러 조직들, 각 계층 인사들을 망라하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면서, ‘계급적 차이,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오직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단결해야’함과 ‘계급적 리익을 민족적 리익위에 올려세우거나 사회계급적 리익을 위한 투쟁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 대치시켜서는 안 됨’을 주장하였다.

1992.1.25. ‘조국통일 범민족련합 북측본부’ 결성-1990.11.20 결성된 「범민련」을 지원하였다.

1991.8.1. 조평통 책임일군들·범민련 북측본부 성원들과의 담화 “우리 민족의 대 단결을 이룩하자”-「민족대단결」에 입각한 통일우선주의 강조하였다.

1992.2.20.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과 담화시 김일성은 “민족의 대 단결을 도모하는 것은 합의서의 기본정신”이라고 다시 강조하였다.

1992.4.15. 김일성은 80회 생일경축연회 연설에서도 민족대 단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두가지 「전도」가 있다고 주장한다.⁵⁾ 그러나 「평화적 방법」이라는 것도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聯共政府와 合作 또는 「남조선혁명」에 의해 탄생된 人民政權과의 合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평화적 방법은 아닌 것이다. 북한은 공산화통일을 위한 대남전략으로서 南北對話 提議 및 「聯邦制」통일방안 제시로 표현되는 宣傳 차원의 僞裝平和攻勢와 武力挑發 및 地下黨 구축으로 나타나는 顛覆 차원의 統一戰線戰術을 병행 추진하는 二重戰略을 구사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1960년대 이후 주장해 온 「연방제」 통일방안과 「주한미군 철수」는 바로 이러한 대남전략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방제」 통일방안이란 남한내에서 남한 주민에 의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수행된 후, 남한의 革命政權을 흡수하거나 남한 現體制가 聯共政權 또는 容共政權으로 교체된 후, 이 정권과 이른바 「평화적」 합작 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을 적용한 「중심고리 전술」이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무장력을 동원하여 남한을 「비평화적」으로 공산화 통일하기 위한 「중심고리 전술」이다.

북한은 南北對話에 임해서도 二重對話 戰略을 구사하고 있는 바, 형식적으로 한국정부와 대화를 진행하면서, 실제에 있어 非當局

5) 「평화적인 방법」은 ①남한 당국이 인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조국통일 3원칙과 5대강령을 접수·실현하게 되는 경우 ②남한에 반체 자주적인 민주연합 정부가 수립되거나, 중립화되는 경우 ③「남조선혁명」이 승리하게 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③의 경우인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한의 이른바 ‘애국적’ 민주역량과의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비평화적인 방법」은 ①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킨 경우 ②미국 세력이 약화된 경우 ③남한에서 혁명정세가 성숙되고 남한 인민이 북한의 지원을 요구할 경우 달성된다고 북한은 주장한다. 허종호, 앞의 책, pp. 264~271.

間 會談인 「범민족대회」,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한국내 통일논의의 분열 및 內外的 聯共勢力의 糾合 擴散을 도모하고 있다.

Ⅲ. 北韓의 對南戰略 變化 要因

1. 國際環境 變化

첫째, 미·러, 중·러, 일·중 간의 급격한 관계개선으로 말미암아 동북아 4국관계는 對立구조에서 協力구조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또한 4국은 모두 국내문제의 우선적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서 동북아정세의 安定과 平和에 共同의 關心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동북아 4국간 관계의 협력구조로의 전환은 대남적화전전략을 구사하던 북한으로 하여금 현실적응적 변화를 모색케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최근 주변 4국은 북한에 대해 남북한 상호핵사찰 수용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촉구하고 있다.

美國의 경우, 클린턴 신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포기 및 人權狀況의 改善이 없이는 대북한관계 개선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클린턴은 당선후 첫 기자회견(11.12)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의 안보유지를 위한 협력자로 남을 것임을 언급하였다.

日本의 경우, 미야자와 首相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 완전해소가 북·일수교의 선결조건임을 재천명(10.2)하였고, 한·일 정상회담(11.

8)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협조’를 할 것이며, 남북한 상호핵사찰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다.

러시아의 경우, 옐친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11.19)에서 ‘북한과 회담을 통해 핵개발 계획을 중단토록 정치적 압력을 계속 가해 나갈 것’이며 한반도 분쟁시 자동개입을 규정한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의 제1조를 廢棄하거나 전반적으로 再檢討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中國의 경우, 비록 주변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核武器開發 拋棄 壓力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4국간 상호 관계개선 및 대북한정책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 제국주의와의 대결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노선을 명분이 아닌 실제에 있어 계속 고집하여 고립을 자초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북한은 대외정책에 있어 制限的인 經濟開放과 대남 정책에 있어, 비록 皮相的 變化일지라도, 南北共存의 現實適應的 宥和路線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2. 韓國狀況 變化

북한의 대남전략은 또한 한국 新政府의 性格, 이에 대한 國民的 支持度 및 한국의 政治·經濟·社會的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첫째, 1992년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가 42%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한 풍토에서 나온 결과로서, 국민의 지지도가 維新以後 어느 정부보다 높은 것이었다. 또한 大選候補들이 결과에 대해 깨끗하게 승복하였기 때문에, “군사독재 정권과는 민족문제를 논

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고위급회담 및 각 분야 분과위·공동위 활동에 응하도록 하는 압력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1993년에 한국의 신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있는 정통성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남북고위급 회담에 나올 것이나, 동시에 민자당 정부인 점에 착안하여 「로동신문」, 「민민전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신정부에 대한 비난도 지속함으로써 대화와 통일전선사업을 병행하는 이중전략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대통령당선자가 민자당 출신임을 구실로 차기 신정부를 「6공 연장정권」으로 규정하고⁶⁾ 비난을 개시하였다.

둘째, 大選을 전후한 한국의 경제적 상황은 부분적으로 증시 불안 및 수출부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동산 및 물가부문의 미등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으로 經濟的 安定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新 3低 현상 (엔 高, 국제금리하락, 油價安定)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회복되고 1994년에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⁷⁾ 나아가 신정부는 安定基調下의 경제발전과 부의 균형적 발전 추진을 밝히고 있어 富의 不平等深化에 따른 계층간 갈등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의 경제적 갈등을 이용하려는 통일전선사업의 한계를 인식하게 하고 남북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비록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감정에 근거한 투표성향이 나타났지만, 6공이후 꾸준히 진전되어 온 民主化로 인하여 계층간 대

6) 「로동신문」 사설, 1992. 12. 21.

7) 「중앙일보」 1992. 12. 22. 「서울신문」 1992. 11. 11.

립갈등의 양상 및 제반 社會騷擾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신정부도 地域間 葛藤解消政策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主思派가 침투할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안정은 결과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平和攻勢를 선택케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北韓狀況 變化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만성적인 經濟難과 국제적 孤立化에 직면하여 김일성·김정일 체제유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深化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制度的·法的 改善과 人物 交替를 단행하였다. 북한의 경제는 1990년 -3.7%, 1991년 -5.2%의 성장을 기록하여 2년 사이에 10%에 가까운 경제후퇴를 나타냈으며, 1992년에도 공장가동율이 30~40%에 불과해 경제후퇴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무역 또한 1988년에 52.4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1년에는 전년대비 41.4%가 감소한 27.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制限的이나마 對外經濟開放政策을 추진하였다. 북한은 나진, 선봉지역 621평방킬로미터의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나진·선봉·청진 등 3개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였으며 (91. 12. 28), 외국기업과의 합영 합작을 장려하였다. (개정헌법 37조)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10. 5)에서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합영법」을 보완하였다. 대내적으로는, 新貨幣와 舊貨幣를 1:1의 비율로 교환하는 貨幣改革을 실시하였는 바, 이는 유휴자금을 설비투자 와 같은 생산부문으로 전환시키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제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회

의(12. 11)에서 강성산을 총리로, 김달현을 국가계획위원장으로 再任命하였다.⁸⁾

이는 북한이 외자도입과 대외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경제개혁·개방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대남 경제합작 및 교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은 ‘우리식’ 社會主義體制를 固守하기 위하여 憲法改正과 친·인척 및 핵심층근을 중용함으로써 金正日 權力承繼體制를 더욱 강화하였다. 북한의 개정헌법(4. 9)은 國防委員會를 主席 다음의 권력기구로 격상시킴으로써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김정일이 명실상부한 군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취임('90. 5), 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91. 12) 등 군관련 지위를 강화하여 왔는 바, 개정헌법은 국가주석의 군 최고사령관 당연 겸직규정을 삭제하고(제107조),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전반적 무력 통솔권(제113조) 및 중요 군사간부에 대한 인사권(제114조)을 명시함으로써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김정일이 위원장인 김일성을 대신하여 군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수로 취임(4. 20)한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자격으로 664명의 장군을 승진시키고(4. 23) 장교들

8) 강성산은 1984년 당시 총리로서 외자도입을 위한 합영법 제정을 주도하였으며, 1988년부터 함경북도 도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구상을 추진하였다. 김달현은 1988년에 국가계획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의 봉급을 평균 40% 인상시키는 등 군권을 행사하였다.⁹⁾

또한 당중앙위 6기 20차회의(12. 10) 및 최고인민회의 제9기 4차회의(12. 11)를 통해 김정일의 친척인 함북도당 책임비서 강성산을 총리로 재임명하고, 핵심측근인 김용순, 김달현을 정치국 후보위원에, 김국태, 김기남을 당 비서에 각각 임용하는 등 김정일 친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권력구조를 정비하였다.

이는 군부에서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김정일의 위상을 확고히 함으로써 김정일 승계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북한이 당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외경제개방 정책 및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따른 내부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¹⁰⁾

셋째, 북한은 점진적 開放에 대비하고 사회주의 몰락의 조류가 체제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社會統制 메카니즘 및 社會福祉 정책을 강화하였으나, 식량폭동을 비롯한 집단적 항거, 사회적 이완현상의 심화, 청소년 범죄의 증가 등 社會逸脫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해외동포의 방문과 서신왕래를 제한하여 외부정보의 유

9) 「로동신문」은 7월 27일자 논설에서 김정일을 “당 국가 군대의 수위”라고 호칭하고, 중앙방송은 8월 1일 김정일주의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하였으며, 10월 11일 김정일이 당과 국가의 사업전반 뿐만 아니라 남북대화 및 통일문제까지도 지도하고 있음을 밝혔다.

10)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창건 47돌에 즈음하여 집필한 논문(1992. 10. 10) 「로동신문」 1992. 11. 2.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 집권당 앞에 경제건설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지만, 경제건설 일면만 내세우면서 당을 강화하고 당원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지 않으면 경제건설 자체도 잘 할 수 없고 사회주의 전취물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

입을 차단하고, 1992년 상반기에 356회의 각종 집회 개최 및 12곳의 정치범 수용소를 통해 사상교화 및 물리적 억압을 계속 강화하였다. 특히 정권수립 이후 최초로 각 부문의 인텔리들이 참가한 「조선지식인대회」(12. 9~10)를 개최하여 이들의 理想的 動搖를 방지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동시에 북한은 김정일 생일(2. 15)전에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生活費를 15년만에 평균43.3% 인상(2. 13)하였고, 社會保障年金은 50.7%, 각급학교 장학금 33%, 벼·옥수수 등의 국가매입가격은 26.2~44.8% 인상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통한 주민들에 대한 懷柔作業도 병행하였다. 또한 개정헌법에서 법률에 의한 사회통제 강화를 천명하고(제18조), 형사소송법 등을 정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법무생활 강화를 통한 사회통제를 더욱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에서 일탈행위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식량난이나 정치적 무력감이 해소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일탈행위의 빈도는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3년에도 증가할 것이며, 그 내용도 조직화·광역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회일탈 현상의 만연 조짐에 봉착한 북한으로서는 사회개방이 북한사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지극히 신중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남북대화에 임하더라도 離散家族問題를 가급적 회피하려 할 것이며, 이산가족재회를 추진하게 되더라도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인원의 만남만을 주선하려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구조적 변화, 남북간 체제경쟁에서의 열세, 그리고 대내 경제침체 및 권력승계문제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軍裝備의 現代化를 포함한 4大 軍事路線을 견지하여

왔다.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에 비해 量的으로 약 2배, 質的(전력지수)으로 약 1.3배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북한은 군사력의 양적 증강과 더불어 무기의 질적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계속되는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1990년 보다 3.9억달러가 증가한 54.5억달러를 1991년 國防費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1992년에 15개의 차량화·기계화 사단/여단 및 10개의 포병여단을 증편하였으며, 평양방위군단을 창설하고 공군병력 22,000명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¹¹⁾ 북한의 核武器開發 노력 또한 군사력 강화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완성한 상태는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는 언제든지 핵탄두를 조립할 수 있는 핵보유 문턱(nuclear threshold)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중거리 핵탄두 수송수단의 개발과 함께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에 대하여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줄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북한의 軍事訓練은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바, 이는 대남평화공세의 측면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난 특히 油類難에 기인하는 것이며, 북한은 기동훈련의 부족을 思想武裝 강화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軍 現代化작업을 지속할 것이며, 대내외 전략환경의 극복과 김정일 승계체제의 안정을 위해 軍事우위노선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한편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해 「'93년 전쟁설」과 같은 全面戰은 자제할 것이나, 대남적화를 위한 공격적 군사정책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북한이 궁지에 몰

11)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Institute, *The Military Balance 1992~1993*, pp. 140. 152~153.

릴 경우 한국사회 교란을 위한 테러활동이나 게릴라 활동 등 비정규적 침투활동을 전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V. 1993년 北韓의 對南戰略 展望

1. 네가지 시나리오

1993년 북한은 대남전략은 국제환경·한국상황·북한상황 변수들의 결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가지 시나리오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제환경에 있어 화해무드에 따른 안정이 지속되고, 한국의 정치·경제적 안정이 지속되며, 북한상황에 있어 경제문제와 같은 난제들이 지속될 경우, 북한은 守勢的 適應 차원에서 대남전략을 구사할 것인 바, 강요된 남북대화에 마지 못하여 참석하며 평화노선을 표방한 채, 다차원적인 목적을 위해 통일전선사업을 은밀히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체제유지를 위한 내부역량강화를 모색할 것이다.

둘째, 국제 및 한국 상황이 안정적이면서 북한이 경제난 등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여 내부역량을 강화하게 될 때, 북한은 攻勢的 變革 차원에서 대남전략을 구사할 것인 바, 위장평화공세와 더불어 통일전선전술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여 대남거점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다.

셋째, 국제 및 한국 상황이 안정적인 가운데 북한의 경제난 및 외교난 등이 더욱 악화되어 김일성·김정일체제에 위기가 오는 반면 북한의 군사력은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될 경우, 북한은 自暴自棄的 挑發 차원에서 대남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 바, 무력도발과 같

은 강경적 자세를 취하되 결정적 시기를 찾기 위해 한국의 방위력 정도를 시험하는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국제상황은 안정적이나 한국이 대선의 후유증 및 경제적 침체로 인해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되는 동시에 북한의 내부역량이 여전히 약할 경우, 북한은 상황돌파를 위한 攻勢的 適應 차원에서 대남전략을 구사할 것인 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을 다소 수정한 적극적 선전용 통일방안을 제시하여 남북공존을 모색하되, 북한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대남선전선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1993년 北韓 對南戰略의 方向

그러면 위의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유력한가?

國際(東北亞)狀況은 미·일간 무역마찰 및 일·러간 북방4도문제에도 불구하고, 냉전이후시대를 맞이하여 周邊4國間的 관계개선이 진전되고 있음을 볼 때, 1993년에도 한반도 전략환경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韓國狀況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충실한 정통성있는 민선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안정될 것이며, 작은 정부 및 강력한 정부를 표방하는 신정부의 자율적·형평추구적 경제정책에 따라 경제평등을 토대로 한 지속적 발전이 추진될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안정이 토대를 잡을 것인 바, 한국은 안정속의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反面에 北韓狀況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3차 7개년계획('87~93년) 종료시한을 1년 남겨둔 가운데 최악의 경제상황과 대외적 고립을 겪고 있다. 이에 북한은 경제난 타결

을 위해 경제제도 및 법적 개선과 인물 교체를 단행하였으며, 헌법 개정 및 친·인척 중용을 통해 김정일 권력승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통제와 사회복지 정책을 병행 강화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계속되는 경제침체에 따라 북한사회에는 패배주의 풍조의 만연 조짐과 체제부정적 사회일탈 현상이 암묵리에 확산되고 있다.

이에 북한은 대내·외적 압력과 도전에 대응하여 국가목표의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으나,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변화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¹²⁾ 즉 「남조선 혁명을 통한 적화통일」보다는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에 우위를 두는 ‘先 體制維持 後 赤化統一’ 방향을 정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서 북한은 1993년에 대내적으로 이데올로기적·법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제한적인 물질적 보상을 새로이 제시하는 당근과 채찍의 정책을 구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대내정책이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북한은 대외적으로 기왕에 추구해오던 制限的 對外 經濟開放政策을 다소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은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1993년에 전개될 북한의 대남전략은 첫번째 시나리오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¹³⁾ 이를 좀더 자

12) 김정일, 앞의 글, “사회주의 위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당의 활동조건과 임무가 변하는 만큼 그에 맞게 당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지만, 당의 계급적 성격과 역사적 사명은 달라질 수 없으므로 혁명적 원칙은 변함없이 견지되어야 한다”고 김정일은 주장하고 있다.

13) 물론 북한이 경제개혁 개방정책에 따른 ‘후과’를 두려워 한 나머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경제난과 외교난이 심화될 경우, 북한의 현 군사력 증강 노선을 고려할 때, 세번째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가동중에 있고, 한·러 기본관계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북한이 과거와 같이 도발을 쉽게 할 수는

세히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난과 권력승계의 공고화 문제에 봉착해 있는 북한으로서는 1993년 남북간의 각종대화 및 경제교류·협력에 호응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2월말 한국 신정부의 출범 및 4월 팀스피리트 훈련의 종료이후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을 탐색하기 위하여 북한은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의 재개를 먼저 제의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의 통일전선사업은 대내외적 악조건 가운데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守勢的 適應'의 차원에서 계속될 것이다. 북한은 통일전선사업을 다양한 실용적 목적을 위해 계속 구사할 것인 바, 對內次元에서는 체제정통성 제고 방편으로, 對南次元에서는 각종 남북대화시 대남 협상력 제고 방편으로, 對外次元에서는 「범민련」, 「범청학련」 등을 통해 한반도문제에 대한 '자주적' 해결의지 등을 천명케하여 국제적 정통성 확보 방편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컨대 북한은 1993년에도 위장평화공세와 통일전선사업의 2중 전략을 계속적으로 구사하되, 주어진 주·객관적 조건에 적합하도록 보다 신축성있는 방향으로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1993년 北韓 對南戰略의 內容

첫째, 對南 統一政策과 관련, 북한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등 조국통일 3원칙을 남북합의서 이행·실천의 근본원칙으로 견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바, 1993년에도 이 논리를 계속 주장할 것이다. 북한은 자주원칙에 근거하여 주한미군 철수 및 팀스피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세번째 시나리오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리트 완전중지를 거듭 주장할 것이며, 평화통일원칙에 근거하여 미국의 핵우산 제거,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실현, ‘先 軍縮 後 信賴構築’을 주장할 것이다. 또한 민족대단결원칙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 철폐, 방북구속자 석방, 창구다원화, 연방제 통일방안 채택을 위한 정치협상회의 소집 등을 거듭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승계체제가 확고하게 안정될 경우, 1993년 하반기에 제7차 노동당대회를 개최, 한국의 신정부 통일정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 각색된 「연방제」안을 제시하거나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는 등 평화공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나아가 북한이 한국에 비해 국력의 전반적 열세를 현저하게 느끼게 될 경우, 북한은 당 규약 전문에 있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과업 완수’라는 대목을 개정함으로써 김정일체제의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현상유지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對南 經濟政策에 있어서는 협력 및 교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84년 총리 재임시 합영법 제정을 주도하고, 최근에는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 및 두만강 경제특구 설치에 적극 나섰던 인물을 재등용하였다는 점과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실무책임자였던 인물을 국가계획위원장에 재기용하면서 당내 위상을 높여주었다는 점, 그리고 대일·미외교의 주역인 인물을 승격시켰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향후 북한의 정책은 장기 경제침체국면 탈피를 위해서 대외경제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모두 김일성·김정일과 친·인척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대내적으로 김일성·김정일중심의 북한식 사회주의를 위한 체제단속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근본적 개혁이 없이 제한적인 제도적·인적 조치를 통해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구 소련 및 동구권의 몰락 이후 무역 및 경제협력이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선진자본주의국가와의 교역도 외채문제로 인하여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각종 경제법규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큰 매력이 없는 북한에서는 1993년에도 원유, 원자재, 기술 및 자본재의 부족으로 인한 전반적 산업활동의 위축이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대일수교를 통한 배상금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시도할 것이며, 그 선결조건이자 북한경제와 실질적 협력·교류를 이룰 수 있는 한국과의 관계개선 및 합작·교류에도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對南 軍事政策에 있어서는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전략환경의 극복과 김정일 권력승계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하여 군사우위 노선을 계속 강화할 것이며, 경제적 실리추구를 위한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해서 전면전과 같은 도발전략은 자제할 것으로 보이나 대남 적화를 위한 공격적 군사정책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민주당정부의 등장에 대응하여 주한미군철수를 더욱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며, 한국의 신정부에 대해서는 군축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국제적으로 해소되고, 남북한 상호핵사찰 실시가 타결될 때까지는 일본의 플로토늄 수입에 따른 핵무장 가능성과 「한국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왜곡된 주장¹⁴⁾을 계속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14) 북한은 1992. 12. 1. 「민민전」 중앙위 명의로 ‘남측의 핵무기 개발 진상 공개장’을 날조 발표하였고, 12. 10. 조평통 성명으로 규탄하였으며, 그 외 직총(12. 15), 사로청(12. 17), 농근맹(12. 18), 사민당(12. 19)의 성명 및 담화를 통해

심각성을 희석시키려 할 것이다.

넷째, 對南 社會·文化政策에 있어서는, 兩面戰略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은 한국이 의도하는 인적·물적 교류 보다는 자본 합작을 통해 북한의 경제발전을 모색해 나가되, 이산가족 등의 인적 교류를 제한된 장소에 국한시킴으로써 한국으로부터의 자유개방 사조 도입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할 것이다.

다섯째, 海外同胞政策에 있어서는 1993년 광복절을 계기로 해외에서 「제4차 범민족대회」를 개최하여 주한미군 철수 및 1995년 「조국통일」 완수를 위한 투쟁결의를 재다짐하는 등 남·북한 및 해외의 聯共勢力의 규합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2년 발족한 「범청학련」의 활동을 강화하여 통일문제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국론 분열도 계속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볼 때, 1993년 북한은 대남전략의 方向에 있어 남 북고위급회담과 「통일전선」사업을 병행하는 二重戰略을 변함없이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내·외적 변화요인으로 인해 한반도공산화 통일보다 체제유지로 북한의 국가목표 우선순위가 이동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대남전략의 內容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경직된 전략·전술보다는 實用的 目的에 근거한 柔軟한 戰略·戰術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난을 연일 전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상호사찰 회피에 따른 내외적 여론이 악화되자 허위사실을 날조,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南北韓 關係의 現況과 展望

朴 英 鎬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 목 차 >

- | | |
|-------------------------------|--------------|
| I. 서 론 | 나. 핵문제 |
| II. 남북한 관계 현황 | 다. 이산가족문제 |
| 1. 남북고위급회담의 경과 | 라. 남북경협문제 |
| 2. 주요 현안 | III. 평가 및 전망 |
| 가. 「기본합의서」 성격 및
부속합의서 내용문제 | IV. 결 론 |

I. 서 론

금년 2월 남북간에 「基本合意書」와 「非核化 共同宣言」이 발효됨으로써 남북한 관계에서 획기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어 5월에 군사,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 교류·협력 등 共同委員會가 발족되고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 분야별 附屬合意書가 발효됨으로써 이러한 기대는 더욱 증폭되었다.

그러나 고위급회담, 분과위 회의, 핵통제공동위 회의 등 총 90여 회의 다양한 회담이 개최되고 부분적인 경제교류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가 실질적인 和解·協力의 단계로 이행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제8차 고위급회담 이후 북한이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결정 등을 이유로 공동위원회의 稼動 및 제9차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동결함으로써 남북한 관계는 梗塞局面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고위급회담을 중심으로 전개된 금년도의 남북한 관계를 검토·평가하고, 1993년의 남북한 관계를 전망한 후, 새로운 정부의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남북한 관계 현황

1. 남북고위급회담의 경과

1992년 2월 18~21일간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은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및 「분과위 구성·운영합의서」를 발효시켰다. 남북관계에서의 懸案과 관련, 한국측은 북한측에 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핵사찰 수용, 核統制共同委員會의 조속한 발족, 동시 상호핵사찰 및 시범사찰,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의 협의과정에서 非현실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一括合意·同時實踐」 원칙을 다시 주장하면서도, “쌍방이 先次性を 부여하고 합의와 실천에 독립성을 가진 문제에 대해서는 「件別合意·件別實踐」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은 「기본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를 발효시키는 이외, 현안문제인 핵문제와 이산가족문제 등에서 상호간의 입장차이를 축소하지는 못했다.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3월중 政治, 軍事, 交流·協力 分科委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후 제7차 고위급회담 이전까지 각 분과위원회와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등 총 17회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統一 3原則의 해석, 부문간 우선순위, 부속합의서의 성격과 이행방법, 공동위원회 구성의 우선순위 및 機能과 數, 접촉창구문제 등에서 남북간 입장차이만 露露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부문별 부속합의서와 相互核査察規程을 마련하지 못한 채, 1992년 5월 5~8일간 서울에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 동 회담에서 남북한은 부속합의서 작성에 앞서 「기본합의서」에 발족시한이 명시된 南北連絡事務所 및 「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발효시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1992년 5월 18일자로 군사,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 교류·협력 등 3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합의하였다. 남북한은 또한 「기본합의서」 화해분야의 이행기구로 南北和解共同委員會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각 공동위원회의 실천지침으로 기능할 부문별 부속합의서중 「不可侵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1일, 「交流·協力 부속합의서」는 9월 5일, 「和解 부속합의서」는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9. 15~18) 이전에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특히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100명, 예술인 70명, 기자 지원인원 70명으로 구성되는 「離散家族 老父母 訪問團 및 藝術團」의 서울·평양 동시교환 실시에 합의함으로써 합의서 실천의지의 일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제7차 고위급회담 이후 제8차 고위급회담이 개최되기까지 政治 分科委員會는 4차에 걸친 회의와 3차의 위원장 접촉, 4차의 위원접

측을 가졌고, 軍事分科委員會는 5차의 회의와 1차의 위원장 접촉, 3차의 위원접촉을, 그리고 交流·協力分科委員會는 4차의 회의와 1차의 위원장 접촉, 2차의 위원접촉을 가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 양측은 부속합의서의 형식을 單一文件으로 한다는데 우선 합의하고 내용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對美 平和協定, 민·관영 言論誹謗 중지, 법률·제도적 장치 철폐, 무조건 자유왕래, 외국과의 방위조약 폐기 등을 제시함으로써 협상의 실질적 진전에 장애를 조성하고 고위급회담을 對南革命戰略차원에서 이용하려는 의도를 보여 주었다. 이에 따라 교류 협력분야에서만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고 화해 및 불가침분야는 쌍방의 의견대립으로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작성시한을 넘긴 채, 부속합의서의 일괄타결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남북한은 제8차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한편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교환 실현을 위하여 남북한은 6월 5일 제1차 실무대표접촉을 가진 이래 총 8차례의 접촉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1차 접촉부터 핵문제, 이인모문제 등을 구실로 실무절차문제 토의를 미루어 오다가 제4차 접촉(7.8)부터는 이 문제들을 방문단 교환의 前提條件으로 내세웠으며, 제6차 접촉(7.20)부터는 포커스렌즈 훈련중지를 전제조건으로 추가하였다. 결국 노부모 방문단 교환실시는 북한측의 비협조적 태도로 말미암아 霧散되고 말았으며, 이산가족문제를 南北 協商過程에서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북한측의 의도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 주었다.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측은 附屬合意書 내용상의 異見을 타결하여 서명·발효시키고 핵문제 및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교환사업을 포

합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한편 북한측도 동 회담에서 부속합의서 작성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핵문제 및 이인모문제 등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하나의 조선」 논리 고수, 국가보안법 폐지, 駐韓美軍 철수, 韓·美相互防衛條約 철폐 등을 목표로 하는 주장들을 견지하여 이들 내용들이 부속합의서에 「附記」 사항으로 처리된 채,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 3개 분야의 합의서가 채택·발효되었다. 남북한은 이밖에도 「南北和解共同委員會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키고, 1992년 11월 5일부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필두로 1주일 간격으로 군사,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 교류·협력 등의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을 1992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각종 합의서 내용에서의 남북간 異見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기본틀 마련(「기본합의서」 발효, 3개 분과위원회 발족) — 實踐·履行機構 구성(남북연락사무소 설치, 4개 공동위원회 발족) — 附屬合意書 채택 — 共同委員會 가동으로 이어져,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각 공동위원회의 개최는 물론 이산가족문제, 南北經協문제, 군사직통전화 가설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각종 접촉을 화랑훈련, 92독수리훈련 등을 구실로 거부하였다. 또한 북한은 한·미 양국의 팀스피리트훈련 재개결정(10.8, 제24차 韓·美年例安保協議會)을 남북대화 중단의 이유로 주장하고¹⁾ 제9차 고위급회담(12.21 24예정)마저 일방적으로 동결하

1) 10.12 외교부 대변인 성명, 10.13 祖平統 대변인 성명, 10.14 연행목 총리 對南

였다. 이에 따라 1991년 12월 13일 「기본합의서」 채택이후 남북한 사이에 조성된 남북화해 협력분위기는 冷却局面에 처하게 되었다.

2. 주요 현안

가. 「기본합의서」 성격 및 부속합의서 내용문제

「기본합의서」 발효에 즈음하여 한국정부는 상호체제존중, 내정불간섭 등 “平和共存原則”에 입각하여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긴장완화 및 평화보장, 다각적인 교류 협력 등을 통해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자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이 한국정부는 「기본합의서」를 남북화해·협력시대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문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기본합의서」를 統一戰線 戰術차원의 對南工作을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²⁾ 7.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중 「自主」는 주한미군철수로, 「平和」는 형식적인 군축으로, 「民族大團結」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불법방북자의 석방이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부속합의서 채택과정에서 남북간 爭點事項들이 未解決 상태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타 조항들도 구체적 대책보다는 선언적 의미 또는 기본적 원칙 및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재개되고 각 공동위원회가 가동될

편지, 11.2 駐中대사 기자회견, 10.29 및 11.14 駐러시아대사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 재개결정을 “북침위협”, “외세의존적 반통일자세” 등으로 비난하고 南北對話가 중단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2) 1992년 2월 20일 김일성의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접견시 담화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와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자” 참조. 「로동신문」, 1992. 2. 21.

경우 이러한 문제들은 남북합의사항의 이행을 遲延시키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 핵문제

지난 5월 이후 國際原子力機構에 의한 5차례의 임시사찰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3월 이후 지난 12월 17일 제13차 核統制共同委員會 회의까지 총 21회(본회의 13회, 위원접촉 8회)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相互核査察規程 마련은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남북 양측은 사찰원칙, 사찰방법 및 대상에 관하여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남한이 相互主義원칙에 입각하여 정기사찰과 특별사찰 병행 실시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하여, 북한은 疑心同時解消원칙에 의거한 전면 동시사찰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남한이 핵물질·핵시설, 핵관련 군사기지를 포함하여 혐의가 있다고 일방이 주장하는 모든 시설을 사찰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는 데 반하여, 북한은 자국의 군사기지 사찰은 거부하면서 영변 핵시설 대 남한내 모든 美軍基地의 사찰 교환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금년도에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왔는 바, 남한은 핵문제 해결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핵문제는 1993년에도 남북관계에서 최대의 현안으로 남게 되었다.

다. 이산가족문제

사실 지난 20여년의 남북대화과정에서 이산가족문제는 한국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 문

제를 남북관계에서의 전술적 카드로 사용함에 따라서 극히 미미한 성과만을 거둔 상태이다. 금년도에 서신교환이나 제3국에서의 상봉을 통해 약 80건의 남북한 이산가족 접촉이 이루어졌으나, 相互訪問에 의한 상봉은 한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북한은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아무런 前提條件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한 8.15 노부모 방문단 교환사업을 핵문제, 이인모 송환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무산시켰다.

이산가족문제는 한국정부가 계속하여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북한이 이 문제를 전술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남북관계에서의 미해결현안으로 남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과 교류가 북한체제의 최대 취약점인 社會開放과 직결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인도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라. 남북경협문제

금년도에 남북간 직·간접형태의 교역이 지속되고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7월 19~25일간 북한의 金達玄 부총리 겸 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남한의 주요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南北經協 시범사업으로 남포합작공단건설 추진을 요청함으로써 북한의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경협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경제협력사업이 성사되지는 못했다.

북한은 남한기업을 포함한 對外 資本誘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합영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외국인 투자법」, 「합작법」, 「외국인 기업법」을 지난 10월 제정·시행하였으며, 이어 외환관리,

출입국 관리, 소득세 등 후속법령을 정비중에 있다. 한국정부도 남북경협을 남북경제의 相互補完과 북한체제 변화유도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핵문제와 같은 여타 현안이 해결될 경우 對北經協은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Ⅲ. 평가 및 전망

1992년도의 남북한 관계는 한마디로 期待와 失望의 혼합으로 평가된다.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10개의 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되고 남북대화사상 최대의 頻度를 기록한 90회 이상의 각종 회담이 개최됨으로써 남북한 관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간 합의를 파기, 공동위원회의 가동과 제9차 고위급회담 개최를 동결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다시 한번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금년도의 남북한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는 첫째,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각종 합의서의 발효로 남북한 관계가 공식적이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이에 따라 부분적, 散發的으로 진행되어온 남북대화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각종 회담의 지속적인 개최로 남북 쌍방이 각기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보다 정확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핵심적 현안에서 쌍방의 상호 讓步措置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뚜렷하게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측면으로서는 첫째, 많은 합의서의 발효와 사상최대 빈도의 회담개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각종 합의서가 남북 쌍방의 견해가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결되었기 때문에 향후의 남북대화는 또 다른 합의서를 낳는 지루한 협상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남북대화를 戰術的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북한의 의도가 드러남으로써 남북대화의 效用性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對北政策에서의 一貫性 缺如 및 조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이 팀스피리트훈련 재개결정을 이유로 남북대화를 중단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북한은 핵개발문제가 對日修交 및 對美關係 개선에서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판단, 남북대화의 전술적 효과를 재평가하려는 것이다. 둘째, 남북대화 不振의 책임을 한국측에 轉嫁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은 공동위원회 가동에 따른 남북교류 활성화가 북한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내부 思想統制 및 體制整備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하여 남북대화를 지연시키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은 한국의 정권교체기를 이용하여 대화를 지속하기보다는 주변정세 및 남한정세를 관망하면서 對南煽動을 강화함으로써³⁾ 한국사회의 혼란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3) 북한의 한국 大選관련 煽動은 1992년 10월 중순이후 특히 강화되었다. 1992년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북한은 「평양방송」, 「중앙방송」 및 對南宣傳방송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의 「구국의 소리」방송 등을 통하여 총 119건의 논설을 방송하였다. 북한은 이를 통하여 특정 정당 및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한편, 한국내에 소위 「민주연합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통일전선활동을 선동하였다. 「세계일보」, 1992. 12. 2.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팀스피리트훈련이 종결되는 1993년 봄까지는 小康狀態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북대화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내에 남북관계가 확고한 和解·協力關係로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바, 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개발문제의 해결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해 1992년 5월 이후 실시되고 있는 임시사찰을 이유로 북한의 핵개발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남북 相互核査察規程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비핵화 공동선언」의 명실상부한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 상호핵사찰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북한의 핵문제를 남북경제협력과 연계시키고 있다. 또한 1993년 팀스피리트훈련이 종료되면 북한의 핵사찰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중대 현안의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며, 주변 4강의 국제적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이 經濟難 극복과 對西方 關係개선 등 당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핵문제에서의 기존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문제는 1993년에도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다만, 북한이 상호핵사찰규정 마련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1993년 상반기로 예정된 국제원자력기구 6차 임시사찰을 통해 북한의 핵연료봉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고, 그 결과로 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면 1993년 하반기 이후 對北經協이 실현되고 남북관계도 실질적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한은 앞으로도 현재의 체제유지기반을 강화하면서 對南關係에서는 宣傳차원의 평화공세와 顛覆차원의 통일전선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二重戰略을 지속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공동위원회의 활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논의 자유화 주장 등 對南革命路線의 연장선상에서 부속합의서의 이행을 추진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북대화 재개에 응하면서 1993년 8월 15일을 계기로 제4차 汎民族大會를 개최하는 등 대남평화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남북한은 부속합의서 채택과정에서 未解決狀態로 남겨둔 쟁점사항(附記事項)들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각 공동위원회는 해당 분야별 부속합의서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북한은 政治·軍事問題 優先解決원칙과 一括合意·同時實踐원칙을 견지하고 부속합의서 채택시 미합의된 문제들의 우선해결을 고집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가급적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은 부속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북한의 경제현실을 감안,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실리를 획득하려고 할 것이다. 남북한이 당장에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들을 迂廻하기로 합의할 경우에는 經協實現을 조건으로 相互誹謗·中傷·中止 등 부분적인 실천조치가 이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1992년 북한은 헌법개정, 金正日의 원수취임, 총리교체 등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김정일의 지위를 강화하였는 바, 이러한 김정일의 承繼基盤 강화작업은 1993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김정일을 남북간의 정상회담 추진과정에 관여시키고 남북화해의 주도적인 인물로 부각시켜 권력승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南北頂上會談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1993년 2월중 제14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최고지도자 교체와 북한에서의 김정일의 지위 강화로 인하여 남북사이에는 1993년도 후반 이후 남북정상회담문제가 다시 남북간 협의의 대상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은 남한의 大統領을 포함하는 남북 지도자들간의 政治協商會議를 제의해 왔는 바,⁴⁾ 북한이 자진해서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보인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실체를 인정하여 그 원수인 대통령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를 남한 정치지도자중의 1인으로 격하시키고 「기본합의서」 전문의 “특수관계” 규정을 지역 정부간의 관계로 만듦으로써 「고려연방제」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의 發露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頂上會談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정치 실체 首長간의 만남이라는 입장을 확인해야 하며, 북한의 정상회담 이용 가능성에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1993년 남북한 관계는 북한 핵문제의 미해결과 그에 따른 팀스피리트훈련 실시, 북한의 對話遲延 의도, 한국의 정권교체 등에 따라 상반기까지는 小康局面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제9차 고위급회담이 빠르면 5~6월 재개되는 것을 계기로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부속합의서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각 공동위원회의 회담이 가동됨으로써 점진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가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4)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북한은 「남북정치협상회의」(1973.4.16), 「대민족회의」(1973.6.23), 「남북정치인 100인 연합회의」(1982.2.10),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1983.1.18), 「남북연석회의」(1988.1.1), 「남북정치협상회의」(1989.1.1), 「민족통일 협상회의」(1989.9.28), 「남북당국 및 정당수뇌 협상회의」(1990.1.1),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1991.1.1) 등 이름만 바꾼 형태의 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해 왔다.

IV. 결 론

1993년 2월 하순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달리 확고한 正統性의 기반위에서 정책을 작성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남북관계 개선문제를 포함하는 統一政策에서도 자신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일정책은 새로운 통일방안의 제시가 아니며, 더욱이 南北分斷의 현실이 토대가 되지 않아서는 안된다. 또한 통일이 至高의 가치이기는 하지만 통일이 쉽사리 곧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국민들에게 불어 넣어주어서는 안된다.

새 정부는 통일이 南北關係 改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中·長期戰略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북한정권이 당면한 현실적 딜레마를 고려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정권 정책결정자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고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신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長期的인 眼目에서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새 정부는 다음과 같은 政策方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원칙적 입장을 再定立하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으로는 ①平和共存의 원칙 ②內政不干涉의 원칙 ③相互 互惠의 원칙 ④國際規範 및 慣行遵守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세운 후에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단호한 對北協商態度를 보여주는 일방, 短期的 成果에 집착하지 않는 정부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은 段階的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개

선은 장기적 목표와 추진방향이 설정되고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단계에서는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우선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남북관계 개선을 誘導·增進하기 위해서 남한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가 요구된다. 남북관계를 協力的 行爲規範이 지배하는 화해와 협력관계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있는 對北政策의 견지와 더불어 우리측의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이니셔티브가 요구된다.

넷째, 남북관계 개선은 주변국가와의 善隣友好關係 유지와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은 주변국가의 정책이나 입장을 고려, 남북관계 개선이 동북아지역의 安定的 平和定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정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南北協力이 북한정권의 自尊心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북한의 對南協力이 實用主義 세력의 자율적 선택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남북관계 개선은 輿論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현실에서 事案에 따라 협상과정에서 국민에게 公論化할 수 없는 특수성도 있으나, 가능한 한 국민의 支持下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남북관계는 남한 또는 북한 어느 일방의 意志만으로 개선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남한의 주도적 위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새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을 포용하는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며, 북한체제의 현실을 감안하여 단기적 성과도출에 급급하는 자세는 처음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토 론

사회자: 이용필 (서울대 교수)

토론자: 강성학 (고려대 교수)

구종서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국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기덕 (KBS 북한부장)

사회자: 감사합니다. 세분 발표자께서 좋은 발표들을 해주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전에 토론을 활발히 유도하기 위해 제가 몇 마디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야말로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하게 시행됐고 정통성을 훌륭히 표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되신 분이나 낙선되신 분들 다같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 시점을 맞이한 것이 역사적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의미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터전을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거 1890년대 내지 1900년대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는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근래에도 그때와 유사한 패턴으로 역사가 진전되리라고 걱정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한 세분의 논문은 이를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토론을 해주실 토론자 선생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은 따로 소개가 필요없는 널리 알려진 분들입니다. 먼저 고려대학교의

강성학 교수이십니다. 두번째, 중앙일보 구종서 논설위원이십니다. 세번째,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장이신 김국진 박사이십니다. 마지막으로 KBS 북한부장으로 계시는 김기덕 선생이 나오셨습니다.

그럼 이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후 floor에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강성학: 감사합니다. 우선 세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세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여 발표하셨기 때문에 질문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질문을 위한 몇가지 코멘트를 드릴까 합니다.

첫째,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에 관해 말씀하실 때 앞으로 4~5년 뒤를 내다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1993년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되었고 정상회담 등 현상적 문제에만 논의가 집중된 것 같습니다. 민족통일연구원의 성격상 신정부를 논의할 때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최소한 4~5년뒤의 상황을 예상·전망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발표자께서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한 느낌이 듭니다. 미국은 변했습니다. 미국의 기본적인 변화는 국제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 야기된 것입니다. 1945부터 최근 냉전체제가 와해될때까지 미국의 외교정책은 억제에 의한 세계질서 유지라는 정책이었으나, 200년간의 미국 외교정책을 고려할 때 하나의 일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대유럽·아시아에 대해 힘의 균형정책을 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냉전시대에는 미국이 직접 부담을 지는 억제자(Deterror)로서 평화·안정을 유지하였다면 이제는 그러한 짐을 벗어버리고 대서양·태평양을 건너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의 행복한 나라로서 모범을 보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는 정치적 고려보다는 경제문제에 의해 해결되

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과거와는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안보논리의 배제를 통해 경제논리에 의한 경제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변화로 미·일간 마찰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제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일본이 19세기말 英·日同盟을 기점으로 세계강국으로 부상했다면 20세기에는 미국과의 동맹이 일본정책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그런 핵심을 유지하려 하나 미국이 경제적 문제 해결을 우선시 할 경우, 미·일간 갈등은 증폭되리라 봅니다. 미국은 이지역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계속 힘의 균형자로 남으려 하지는 않으며 소련이 망한후 Bipolar는 무너졌으며 이제 Pax Americana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세기를 돌아볼 때 19세기는 Pax Britannica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 시대도 5개 강대국간의 힘의 균형시대였습니다. 오늘날 Pax Americana체제는 모든 것을 미국이 관장하기 보다는 결정적 순간에만 미국이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4~5년 즉 클린턴 행정부내에는 닉슨독트린으로부터 시작된 이 지역으로부터의 군사적 철수는 거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의 군사적·정치적인 탈아세아 정책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로부터 먼저 철수를 시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내 미군의 우선 철수를 원하며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면서 이 지역의 힘의 균형역할자로서 계속 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련된 정책은 민주주의 체제내에서 수행되기 매우 어려운 복잡한 정책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탈아세아정책은 일본으로부터의 철수 보다는 한국으로부터의 철수가 먼저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현재 철수문제를 거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철수

문제가 민감한 쟁점사항이며 과거 카터행정부 당시 지나치게 쟁점으로 제기되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험을 갖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도 공화·민주양당 역시 이 문제를 쟁점으로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이 땅에서 철수하는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하신 한국문제에 대한 신행정부의 입장분석은 93년에 대한 전망으로는 맞을지 모르나 한국문제에 대한 미국 신정부의 입장 특히, 미군주둔 및 계속적인 우호관계 유지 부분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번째 논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문영박사의 오늘 발표중에서 남·북한에 대한 향후 전망을 보면 북한에 대한 전망이 없고, 남한에 대해서는 안정속에 번영이라고 하여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민주정부의 등장, 새로운 민주정부내에서는 대체로 다원주의의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득세하며, 집단적 이기주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북한 못지 않게 남한에서도 집단적 이기주의의 등장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대화나 기본합의서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미·일과 관계개선을 해야 했는데 미·일 양국이 모두 핵문제를 포함, 남·북한 관계 진전을 요구함으로써 합의서 도출은 미·일양국과의 관계진전을 이루기 위한 제스처로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이의 경제교류를 그들은 원치 않습니다. 북한의 취약한 부분은 경제입니다. 북한은 불리한 부분의 교류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원조를 받고자 한다면 차라리 그들은 일본으로부터 원조를 받으려할 것입니다. 일본은 경제적

원조를 해줄 용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원조를 해줄 능력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남한으로부터의 경제협력보다는 일본으로부터의 원조가 북한체제에 덜 위협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이 가시적인 결과는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발표자의 말씀대로 북한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2~3년내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미·일 특히 일본과의 경제교류를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제기하신 몇가지 정책방향을 들어볼 때 정부가 그동안 추구해 온 것과 실제로 추진해 온 것, 또 오늘 발표자께서 제시한 정책사이에 별 차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지적할 사항은 남북통일과 남북대화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남북상호간 주도권을 갖기 위한 대결을 계속해 왔으며 상대방 제안의 타당성이나 우리측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도권쟁탈 논쟁만을 되풀이 한다면 과연 남북한 사이에는 무슨 진전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발표자께서는 남측의 정책을 비판없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남북합의서가 발표된 후 실천이 다소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할 상황이었는가 또 팀스피리트 훈련은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가? 필요하다면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남북대화에 있어서 남한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정치체제 분석에 국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김일성체제 성격때문에 문제가 있다든지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성격때문에 어떻든지 하는 식의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 양체제

의 성격 혹은 정권의 성격에 대한 분석과 개인차원의 새로운 지도자의 영향을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전망할 때 새로운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정부는 그간 북한이 요구하고 남한이 거부해 오던 몇가지 사항중 몇개를 과감히 수용함으로써 정상회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남북한 사이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 이나 이것이 남북통일을 이루는 어떤 기반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자: 그럼 구종서위원께서 코멘트 하시죠.

구종서: 감사합니다. 길정우 연구위원께서는 클린턴 미 신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대한반도정책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미국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지도 않을 뿐 아니라 대외정책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독립적이고 일관적이지도 않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또 미 신정부의 대한정책은 담당자가 누구냐에 달려있으며, 세계전략과 동북아정책 조정과정에서 결정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對日·中政策은 변화되겠지만 대한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길위원께서도 미국의 대한정책을 보다 합리적·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도 언급하심으로써 좋은 대안적 시사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발표하신 논문의 2페이지에서 미국의 대한반도정책과 관련 일관된 정책 기초위에서 독립적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약하다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특히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에서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조정

이 미국의 대중·일 정책과 직접 연관을 갖게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독립성 결여를 이야기할 때, 미국의 對日·中 외교정책의 연장선 혹은 대동북아정책의 고려에서 주변적으로 이해하는데, 앞뒤 표현상의 모순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길위원회서는 문제제기만 하셨습니다만, 미 신정부의 정책이 고립주의냐 국제주의냐 하는 문제는 미국정책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미치는 파장과 효과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향후 클린턴 미 신정부가 고립주의와 국제주의정책 중 어떤 정책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 한국은 앞으로 대미정책에서 국력신장에 따라 주체성이 강화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개입수준을 낮출 것으로 보이며, 동북아 역내 국가간 관계는 긴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산 對 비공산지역으로 양분되어 있던 이 지역이 하나의 국제정치적 단위가 됨으로써 남북한, 중국 등을 포함하여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분위기가 성숙되어 지역 자율성이 강화되리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통일이 세기적 전환기인 2000년을 전후해서 달성되리라 가정해 봅니다. 이런 전환기에 한국은 새로운 관계정립과 관계재조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의 신정부간에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 논문에 부과된 범위는 벗어났지만 그동안 한국의 외교정책은 미·일에 집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 신정부는 냉전의 와해와 동북아 지역이 새로운 정치단위로 등장한 상황에서 강대국과 주변국간의 관계조정을 해야 할 전환기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편중된 미·일관계 및 멀리 떨어져왔던 중·러관계를 균형

있게 재조정함으로써 미 신정부의 정책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허문영박사의 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대남전략정책의 성격을 이중전략적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논리」, 「통일전선전략」 등을 원용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북한대남전략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네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해주셔서 매우 흥미로왔습니다. 그 중 남북한간 적극적인 대화전개에 대한 전망 부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 박영호위원의 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남북 대화와 남북협상과정을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남북간의 중요현안과 문제점을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전망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진전에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는 92년의 현황에 근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 노선의 변화를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일성의 사망을 전망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김정일로의 권력이양과 함께 새로운 정책노선의 조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북회담은 중단되어 있으며 한국정부는 바뀌었습니다. 북의 정권은 안 바뀌었으나 정권내 인사의 변화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점에서 북한정부의 정책변화를 예상할 수 있으며 변화가능성에 대해 비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사회는 과거 중국의 문화혁명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시 중국의 정책실세는 주은래였고 모택동은 상징적 존재였습니다. 지금 북한은 김정일이 정책실세이고 김일성은 후견자로 남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국의 주은래는 개혁가로서 모택동이 적대하던 유소기 노선을 견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文革을 권력투쟁, 노선투쟁 양면에서 보았을때, 권력투쟁

에서 모택동이 이겼지만 노선투쟁에서는 결국 권력투쟁에서 진 유 소기가 이겼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일의 노선이 분명치 않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영호 위원께서는 남한의 대북정책,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여섯가지 정책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외형적으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의 권력투쟁양상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북한의 현 정권을 대상으로 평화적·점진적 대화·협상을 해야 하나 이는 정책적 분석이지 정치행위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의심을 갖습니다. 대화는 정권과 해야 하나 북한 동포의 이익과 입장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공존하면서 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겠으나 실질적으로는 빨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의 시기, 붕괴시기를 촉진시킬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화통일이라고 할 때는 우위에 있는 세력에 의해 평화적 방법을 통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일은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는 역사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1870년 독일통일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허문영박사께서는 93년 예상되는 북한의 대남전략내용에 관해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의 대남전략을 생각할 때 몇가지 고려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의 대남전략의 선택 범위가 현저히 좁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변환경의 변화가 과거와 같은 공작적 차원의 대남정책을 용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식량난·경제난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며 그로 인하여 지도층내부의 분열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 지도역량의 기반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개혁·개방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해 경제를 재건해야 하며 대외적

개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대외개방을 위해서 대내적인 개혁 즉 인권개선, 정치적 민주화, 핵개발 포기 등을 요구하는 외부압력을 여하히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북한은 개방에 따른 체제붕괴 위험과 가중되는 경제위기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 시기에 우리의 대북정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한간의 전면 교류·개방정책을 밀고나가야 하며 우리의 정책목표는 통행·통상·통신의 3통 달성에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통일직전의 동독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사회내에는 소극적 정책추진세력과 적극적인 정책추진세력간에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고맙습니다. 강성학교수께서는 거시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과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구중서위원께서는 아주 미시적으로 자세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구위원께서는 북한체제에 대해 말씀해주셨습시다만 이 문제에 관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한국측 고위관계자가 북경을 방문했을 때 중국측 고위당국자에게 김일성 사망후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에 관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중국측의 답변은 김일성 사망보다 김정일 사망가능성을 먼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정일이 당뇨 등 건강이 안좋아서 중국의 사가 2~3개월에 한번씩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민족통일연구원에서 이러한 정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김국진 박사님께 마이크를 돌립니다.

김국진: 감사합니다. 전환기에 남북한 관계를 전망하고 대북정책수

립을 위해 민족통일연구원에서 이러한 자리를 만드신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93년 한국의 대외정책수립은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며 힘든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세분의 논문에 대해 간략히 질문드릴까 합니다. 우선 미국에 대해 발표하신 길박사님께 몇가지 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문제입니다만 미국 신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대중·일 외교정책이 우선이고 대한반도정책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대중·일 외교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의 경우 무역역조 문제라든지 특히, 중국의 인권관련 문제들로 인하여 이 지역에 미국과의 갈등 관계가 발생한다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관계에서도 쌀시장 개방문제라든지 지적소유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으며 결국 미국의 대중·일관계가 우리에게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과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은 한국에게 긴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주한 미군 문제에 대해 클린턴 정부가 국방비를 1,100억불 삭감하기로 계획함으로써 변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계획에 의해 3단계 감축계획을 세워놓고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개발로 2단계에서 중단된 상태이나 이미 필리핀의 수빅과 클라크 기지 철수로 이 지역에서의 미국 군사력 감축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분이 문제이지 이 지역에서의 완전 철수는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신정부는 부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이익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과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길

박사님이 지적한 방위비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서 주한 미군의 주둔문제에 대한 내부합의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아·태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 문제에 대해 미국 신정부의 관망적인 태도를 갖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 정부 당시에도 이미-길박사께서는 베이커 차관의 논조를 근거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솔로몬 아·태차관보 등 언론·학계의 논조를 감안할 때 미국 정부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군사력 감축시 한·미, 미·일 양자협력체제를 보완할 입장에서 이러한 구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 미국이 아·태지역 전체에서 역할을 줄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아세안 확대외상회담(Asian PMC)을 아·태지역 다자간 안보협력 포럼으로 활용하자는 안이 등장하는 것을 고려할 때 미국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북한 문제에 대한 분석에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한 미국 신정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미국무부와 CIA 간 북한 핵개발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외교정책과 안보정책을 담당하는 기구간에 이견인 것 같은데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에 대한 CIA의 정보자료가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핵개발 문제가 남북한간 상호 핵사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전된다면 미 신정부가 이 문제를 관망만 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최근 미국은 이라크, 북한, 리비아 등 테러리스트 국가들의 핵무기, 화학무기 확산을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남북한 상호사찰을 받아 일·미간의 관계개선

을 이루는 것을 하나의 분수령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핵사찰을 계속 거부하고 핵개발을 진행할 경우 미국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영호위원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한간에 합의서발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개발문제가 여전히 남북관계의 최대 걸림돌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과연 핵개발을 하나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속에서 핵개발을 포기함으로써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원조를 받을 수 있고 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카드를 계속 사용하기에는 이미 카드로서의 유용성은 끝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가설이 가능합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김정일선까지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이 올라가지 않고 IAEA의 사찰만 받으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정책결정 과정상의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은 체제유지의 도구로서 핵개발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북한 관계는 진전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될 경우 동북아 및 아·태지역의 위협요인이 되어 미국의 동아시아 핵전략에 영향을 미치므로 남북한간 협상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한 상호핵사찰을 통한 북한 핵개발 문제의 해결이 없는 93년의 남북한관계는 전망이 어둡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로서 김일성이라는 半神的인 인물에 의해 40년간 통치가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폐쇄체제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방·개혁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김일성이 하루아침에 등소평이 될 수 없는 바,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변화는 대외관계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바, UN가입, 남북한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선언 발효 등이 그것인데, 국제관계 변화에 대한 북한의 적응노력이 남북한 관계 변화로 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아직 북한내부에서 선결해야할 문제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단계에서 북한을 분석하는데는 전반적으로 통일전선전략 등 이데올로기 분석에 집중하였는 바, 이제는 북한체제 자체에 대한 체제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북한경제의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이 북한 체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이점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체제변화를 전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외환경 변화와 국내문제 그리고 남북한관계에서 오는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북한체제가 어느 정도 변화할 것이며 변화방향과 변화속도는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사회의 급격한 체제변화에 대한 대비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김일성의 사망은 김일성체제의 특성상 북한사회체제의 변화에 미칠 가장 큰 변동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어쨌든 핵사찰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통해서만이 남북한 관계의 변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고맙습니다. 그럼 KBS의 김기덕 선생님 코멘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 알고자 했던 몇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코멘트를 대신할까 합니다. 내년도 남북한 관계에 대해 발표자들에게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에 대한 근거로서 최근 변화된 국제환경과 남북한 내부 환경의 변화요인 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변화 요인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데에 대해 저는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변화요인들이 남북관계 진전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으며 또한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해서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진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인모씨 송환문제로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지 못했는데, 핵문제 해결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은 이산가족 문제해결이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 보다 현실적으로 공감이가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문제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들에게서는 북한이 핵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를 제쳐둔 채 경제협력만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 남북한 경제협력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한 신중론 제기에는 저도 공감하고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가의 일회성으로 이 문제가 추진될 경우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진전과 역사성을 갖는 남북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남북한 관계 진전을 위해 우리의 포용력 확대를 요구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가령 팀스피리트 훈련으로 중단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의 포용력 확대를 요구하는 주장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네분 선생님들의 질의 내지는 논평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방어해 주시겠는데 이번은 순서를 거꾸로 해서 박영호 선생님께서 먼저 대답하실까요.

박영호: 우선 네분의 중요한 논평과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주어진 논평과 질문은 대체로 3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년의 남북한관계가 낙관적이나 아니면 비관적이나 하는 문제가 있겠고 두번째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린 남북관계에 임하는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코멘트 또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첫번째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향후 남북한 관계가 어떠한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의 전망은 사실 금년도의 남북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의 남북한 관계를 전망하는 단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년 또는 그 이후 어떠한 식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교수나 김국진 교수 두분의 논평과 구위원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것은 소위 남북한 체제의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북한체제 내부의 분석을 통해서 향후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를 전망하는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가능한 시나리오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로부터 최악의

경우인 현재의 북한식 공산주의 체제가 지속·확산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으며, 이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화 시나리오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내년 전망에 대한 제 생각은 김교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핵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되기 전에는 적어도 당분간 남북한 관계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비관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과 연결하여 남북한 관계가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전망해 본다면, 그동안 남북한 관계를 관찰해 온 저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서서히 진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법개정, 외국인 투자법 및 기업법 등의 제정, 그리고 현재의 외환관리, 출입국 관리 등 법령정비 노력은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개방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완전 개방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물론 수년내에 김일성 사망이라든가 몇가지 돌출적인 변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북한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급격한 체제변화를 나름대로 방지하면서 경제개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완만한 변화과정을 거쳐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제시한 신정부의 정책방향은 그동안의 역대 한국 정부에서 선언적으로 제시되었던 것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 이유는 앞으로 새 정부가 제1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그 어떠한 정부보다 확고한 정통성의 기반위에서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정부의 정책은 선언적인 것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김교수께서 이니셔티브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완만한 북한의 변화 방향이라는 제 판단 및 논리와 연계

시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는 그러한 추세에 맞추어 북한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동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이니셔티브는 남북한의 정치게임 또는 일시적인 gambling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은 그야말로 원칙이 세워지고 일단 세워진 원칙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로서 지금 핵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팀스피리트 훈련재개문제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남북경협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경협과 연계시키기 전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사회적·인적 교류나 경제교류를 통해서 북한 체제를 서서히 개방시키고 또한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열기 위하여 교류·협력을 우선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입장의 근본적 변화는 없습니다만,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남북경협문제와 관련, 정부 당국이 몇번의 혼선을 빚은 경우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과정에서 핵문제가 이슈로 될 때 남북경협이라든가 남북관계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기본원칙을 사전에 명확히 정립하였다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혼선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분명한 원칙을 세운 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단호한 협상태도를 북한측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팀스피리트 훈련문제가 어떻게 핵문제 및 남북대화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9페이지에 네가지 이유로 설명해 놓았습니

다. 김기덕부장께서 미시적인 문제로서 이산가족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중요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문제를 정책적 최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북한측이 이를 자신들의 목표달성을 위한 협상 카드로 이용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측의 그러한 의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산가족문제를 남북관계에서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서 우리 정부가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경협문제는 이미 제 논문에서 남북한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으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문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 있는 북한경제 전문가에게 질문을 넘기기로 하고, 남북정상회담문제의 경우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해본 것입니다. 이미 김일성이 후견인이고 김정일이 실질적인 통치자라는 지적이 있었습시다만, 사실 그러한 지적은 올해 북한 관찰자들 사이에서 많이 언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에서 내년도에 출범하는 우리 신정부가 어떤 큰 이슈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경우 김정일의 권력승계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으로써 이용하기 위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 정부는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허문영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허문영: 감사합니다. 김기덕부장께서 남북한 관계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느냐, 비관적인 요인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것을 좀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국제적 상

황에서 본다면 동북아 관계에 있어 미·일간의 무역분쟁, 미·중간의 인권문제, 일·러간의 북방4도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 내부상황을 보면 이번 대선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역감정에 근거한 투표성향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향후 신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큰 당면문제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감한 인사정책을 통해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상대적불평등 해소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용면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되, 방법론으로는 점진적 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 북한은 이를 놓치지 않고 이용할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을 전개하는 祖平統은 제가 볼 때 고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선과정에서 「민주연합정권 수립」이라는 것을 내세워 야당에 대한 지지를 원격 선동함으로써 한국내부의 분열을 획책하는 한편, 대선이후에는 통일전선 전술차원에서 신정부에 대한 비난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불안정을 계속 획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중전략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사회에서 건전한 민주화가 완성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남북통일 뿐 아니라 남쪽에서의 민주화 완성을 위해서 지역감정의 근본적인 해소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내부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47주년에 즈음하여 김정일이 발표한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 논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하나는 북한 내부문제에 있어 여전히 사회주

의적 통제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주장입니다. 혁명적 당건설에 있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대외관계에 대한 주장입니다. 지난 4월 15일 김일성의 80회 생일때 세계의 사회주의 정당 대표들이 모였었는데, 약 70여명의 대표들의 서명을 받아 「평양 선언」이라는 것을 북한은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을 저는 상당히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외관계에 있어 북한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승인외교, 경제적으로 경제발전 및 협력외교, 군사적으로 안보외교, 그리고 통일외교, 이 네가지를 추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북방삼각관계가 무너짐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들과와의 연대성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성 약화를 그냥 좌시할 것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북한은 국가 대신에 정당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회주의 정당들과의 연대성 강화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이번 10월의 논문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국가라는 말은 안 나오고 그대신 사회주의 정당 또는 진보적 정당과의 연대성 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김정일의 방침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대남관계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남북한관계에 있어 지금 북한은 여러 정책들을 앞에 놓고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갈팡질팡,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심사숙고·조정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 한국의 상황과 국제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대남전략은 결정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냐? 김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핵무기개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언제 결판이 날 것이냐? 제 생각에는 내년 3월이라 봅니다. 그 이유는 국제핵사찰에 의해 영변

원자로에 있는 연료봉이 검출되는데, 그때 만약 88년~89년에 이미 빼내고 새것을 집어넣은 것으로 밝혀지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판단될 것이고 그러면 전세계적 차원에서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도 錢基琛 외교부장의 발표처럼 “국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우리도 원치 않는다”는 논조였기 때문에, 만약 88년, 89년에 한번 빼낸적이 있었다면 전세계적인 압력이 가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은 참으로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게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IAEA에서 북한이 한번도 빼낸적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면 상당히 유화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핵사찰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나? 그것은 사찰대상과 방법의 문제였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특별사찰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서 북한은 못받겠다는 것이고 저희는 받으라는 것입니다. 대상에 있어서는 군사기지 사찰문제인데 제가 볼 때 만약 북한이 연료봉을 바꾼 적이 없다면, 한 두군데 군사기지를 쌍방간에 합의해서 사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북한 군부의 저항을 고려하더라도 대내외적 난제에 처한 북한으로서는 그 정도까지의 입장 진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의 정책을 크게 대외정책, 대남정책, 대내정책이라는 세방향에서 본다면 강성학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던 문제입니다만 저는 대남교류가 우선이나, 대일본교류가 우선이나는 것보다 북한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더욱 앞세우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북한이 UN에 가입하기 이전에 UNDP는 평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유일한 在평양 국제기구인 UNDP를 통해서 두만강특구 등을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함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헌법을 개

정한 것이라든가 등등을 놓고 볼 때, 북한은 대외정책으로 제한적인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남북교류나 대일본관계보다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남정책으로는 수세적 적응차원에서 여전히 이중 전략을 구사할 것이되, 핵사찰 문제만 타결되면 경제협력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산가족문제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산가족문제에 있어 북한은 사회개방의 충격을 우려하여 응하지 않는 측면도 있으나, 한국전쟁때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사망했고, 특히 함경도 일대에 전염병이 만연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북한측의 논리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인원만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감축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정치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제 논문에서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제임스 로제나우의 가설을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로제나우는 “작고 폐쇄되고 저발전인 국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제일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인변수이다. 그 다음이 국제환경변수다. 그 다음이 체제변수다. 마지막으로 사회변수이다”라고 했는데 로제나우의 가설은 북한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의 자연적 생명이 끊어져야 북한에도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저희 연구원에 왔던 중국학자의 얘기로는 러시아 주치의에 따르면 김일성이 적어도 3년간은 건강할 것으로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길박사님 대답해 주실까요?

길정우: 부족함이 많은 논문인데 너그럽게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신 질문이 여섯 일곱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개 그렇듯이 한두가지 질문은 코멘트 속에서 답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교수께서 지나치게 낙관적 관측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클린턴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 국내언론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사실 언론의 논조는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12년만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식이었습니다. 마침 그동안에 제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은 가능하면 덜 비판적인 글을 쓰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비치는 비판적인 논조의 근거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제시하는 낙관적인 근거보다 별로 타당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제에 제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는 것이 낫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 전반적인 톤 자체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덜 비판적인 관측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사실 제 논문이 순수한 학술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 자신이 정책 페이지를 쓰면서 비판적인 관측을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지나친 비판보다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선에서 낙관을 하는 것이 정책 페이지로는 더 나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규모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영어로 철수(withdrawal)라는 말을 자꾸 씁니다만 미행정부 관리들이나 학자들은 학술용어에 있어서 withdrawal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대신에 감축(draw dow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말하자면 규모

를 축소시킨다는 말입니다. 규모는 분명히 축소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을 예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축소가 될 것입니다. 단 주한미군의 존재는 글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있지 않느냐, 좀 더 말씀드리자면 주한미군의 존재라는 것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비증강이라든가 중국의 군사현대화라든가 이 모든 것을 포괄한 인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방위금분담문제와의 연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릴 바 있습니다.

또 하나의 덜 비관적인 예측의 근거로서 한국의 입지라는 것이 대미관계에 있어서 70년대말 당시와는 달리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강대국과의 관계 재조정의 필요성을 김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와 달리 미국의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우리에게도 넓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강교수님이 주일미군보다는 주한미군이 더 먼저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는데, 글썄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일관계에 있어서 주일미군이라는 것이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leverage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있어서 그렇게 leverage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표현자체를 너무 꼬아서 쓰다 보니까 제가 만든 함정에 제가 걸린 꼴이 되고 말았는데, 이렇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대일본 정책과 우리의 정책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니다. 미국의 대동북아 외교가 한반도에 분명히 파급효과를 미친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에 미치는 파장보다는 한국에는 좀 미약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대중·일외교가 한국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김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인권문제와 통상을 연계시킬 경우에 중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또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일무역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국내법 조치를 강화할 경우에 그 국내법이라는 것이 어느 한 국가를 지정해서 보복하는 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가 한국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의 인식속에 존재하는 대한정책이라는 것이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의식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파급효과까지를 노려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미국의 대외정책이 고립주의나 국제주의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한 미국내의 논의는 작년 약 일년반동안 그 빈도수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고립주의나 아니면 국제주의로 가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지난 1년간의 프로젝트로 연구했던 자료에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200년 역사속에서 국제주의적 성향을 보였던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기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클린턴 자신이 유세당시 국내문제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대외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상대적으로 약한 듯한 인상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당선이후의 기자회견이라든가 또 클린턴의 측근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국제적인 사안에

대한 개입을 상당히 강조하는 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국방장관에 임명된 Les Aspin이라든가 국가안보회의의 Tony Lake 과 같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서 미국이 방관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분석됩니다. 다만 변화가 있다면 미국이 개입하는 명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부시행정부때 다소 미약해졌던 민주주의, 인권 또 핵무기나 미사일의 확산방지 등의 문제가 하나의 강도있는 명분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미국이 지역분쟁에 개입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미국으로서는 세계적인 사안에 개입을 포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구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적해주신 동북아 지역이 자체적인 단위로서 지역적인 자율성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한국도 입장을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제 글에서 한·미쌍무관관계가 아닌 역내 다자간 협의체 구상을 언급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차원에서 한국이 우선적으로 맞게될 중요한 국제적 사안이 바로 이러한 역내 다자간 안보포럼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나온 소위 「미야자와 독트린」 같은 일본 자체내에서의 안보협의체구상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대안이 원하든 원치 않든간에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국진 교수님이 지적하신 내용 가운데 아·태지역의 안보협의체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미행정부의 관리 솔로몬의 말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솔로몬 전 동아·태차관보의 글에도 아·태안보협의체의 구상에 대한 중요성, 의미 자체에 대해서

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에 비해서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미행정부의 Bill Clark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12월 3일자 텍사스 휴스톤에서의 연설문을 보면 역시 다자간 협의체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정가나 의회나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 본 제 느낌에 의하면 어떻든 그 아이디어 자체는 명분상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공식적인 문건에서는 계속적으로 등장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도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 어떤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가 하면, “미국은 동아·태지역 있어서 쌍무관계를 통해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다자간 구상을 통해서 쌍무간 협약을 보완하는 의미는 물론 있지만, 그것을 뒤집어서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앞세우고 쌍무관계를 뒷전에 둘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라는 식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통해서 제3의 국가가 미 국익에 반하는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하는 것을 미국이 이 시점에서 왜 용납을 해야 하는가? 그런식의 반문을 통해 볼 때 이 용어 자체 즉, 그 구상 자체는 정책에서 배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미국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역시 의문이 갑니다.

미·북한관계와 관련 핵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상호사찰 없이 핵개발이 진전될 경우에 클린턴의 대응이 강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중의 하나가 우리의 경우에서 보면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지요. 상호사찰을 받지 않고 결국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다시 말해서 한·미간의 협력방안이 되겠습니다만, 그 방안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시점에서 핵문제의 진전이 있을 경우에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그 대안개발이 더 어렵고 사실 우리에게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해서는 김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팀스피리트를 재개한 우리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어떤지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 행정부관리들에 의하면 “지난번의 팀스피리트 훈련재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 행정부는 한국에 블랭크 체크, 즉 공수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정부가 하자는 대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받았다. 다시 말해서 한국정부가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한 것에 대한 미국의 관측은 한국정부가 현시점에 있어서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강한 압력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차례에 걸친 방북결과 발표된 12월 21일자 Asia Society의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현 시점에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할 경우, 북한이 보일 반응을 뻔히 알면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지적을 하고 있음이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floor의 선생님들로부터 코멘트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손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 연구소 교수, 배손근입니다. 아까도 나온 바와 같이 한반도가 100년 이래의 호기를 맞이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일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련의 변화나 중국, 일본, 미국의 변화 등을 우리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인가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주로 인식이나 추론, 방향

제시가 대외적인 요인에 비중을 좀 크게 두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부에서 민족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종래의 논의와 같이, 4강과의 문제였다 우리 남북한의 문제를 연계시키는 비주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를 중심으로 주변 4강을 연계시키는 즉 four two가 아니라 two four가 되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문제입니다. 허박사님 논문 8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북한 경제의 공장가동률이 30~40%에 불과하다는 추론입니다. 우선 한국의 경우에도 공장 가동률은 70~80%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30~40%라 한다면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가지가 나옵니다만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선 체제유지 후 적화통일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물론 체제유지가 급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적화통일을 할 여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또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 같은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10페이지를 보면 북한의 92년도의 변화에서의 주요 양상으로 제기한 것이 이를테면 생활비를 15년만에 평균 43%를 인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보장연금을 한꺼번에 50%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각급학교 장학금을 33%, 또 벼, 옥수수 등의 국가매입가격을 한꺼번에 26%에서 44%를 인상합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경제수치를 보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비유해 볼 수 있겠는가. 공장가동률이 30-40%밖에 안 되는데 수요는 이렇게 대량창출이 된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여쭙어 보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회자: 다른 분들의 질문을 한두가지 더 받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세응: 허문영 선생님께 짚막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때 북한이 취한 태도말입니다. 저 자신이 공보, 문화쪽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석을 해보아도 결론이 안 나왔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때 상당히 계획된 조치같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선과정에서의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의 북한의 태도가 진짜 그 정당을 지지하라고 한것이 도움이 됐는지, 역효과가 나타났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두번째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대남선전이 대통령 확정후의 어떠한 전략적인 문제를 포함했었다 했던 점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한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예, 윤교수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윤영오: 국민대 윤영오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정권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붕괴되어야 된다, 고사시켜야 된다 등의 견해들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 통일비용이 엄청나고 희생이 많다는 상반된 얘기도 많은 실정입니다. 북한이 지금 붕괴되면 우리가 통일비용 또는 기타 많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붕괴되는대로 흡수통일이 바람직한 것인지 Yes/No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만일 이러한 상태로 붕괴되지 않는 쪽이 바람직하다면 경협을 통해서라도 기사회생시켜 점진적인 통일방

향을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단순한 논리부터 규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회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허문영박사한테 질문이 집중된 것 같은데 허박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발표하신 분이냐 아니면 토론을 하신분께 부탁을 드리죠. 허박사님, 우선 간단하게 얘기 해 주시죠.

허문영: 윤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사회에 너무 극단적인 논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을 몰락시켜야 한다는 논리와 북한을 회유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제가 볼 때 둘 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북한을 이해 하는데 있어서 강경적인 보수적 자세나 또는 일부 우리 젊은 학생들의 생각처럼 진보적, 환상적 자세, 둘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북한에 대한 이해에 있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그들의 역사적 행태를 분명하게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에 있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그러나 그 대응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진보적으로 가자는 것도 성급히 가자는 것이 아니라, 또한 회유나 몰살의 개념이 아니라 박영호 박사도 언급했습니다만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들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이 이중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범민주연합이 형성되더라도 좋고, 안되더라도 북한에게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월 10일 발표된 김정일 논문을 보면 민주적 정당과

통일전선을 이룩 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투쟁에서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단체들과의 단결을 강화할 것”과 “사회제도나 정견, 사상과 신앙, 민족과 인종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할 것”임이 주장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떠한 정권이 수립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에 유리할 수도 있지만, 또 이번에 이른바 범민주정권이 수립 안되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통일전선전술차원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12월 21일 노동신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정부를 아시다시피 ‘6공 정권의 연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대남비방을 하겠다는 전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북한을 이해할 때 자유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이해함으로써 북한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식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배순근 교수님의 질문인데, 저는 경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인용할 수는 없으나, 고영환씨 증언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환씨의 “평양 25시”에 보면 어떤 외교관이 해외근무후 평양에 돌아 왔는데, 거주할 집이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당시 북한은 통일거리에 5만채의 아파트를 짓고 있었고, 이에 아파트를 배정받기 위해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아파트 건설측에서 아파트에 유리를 끼워주고 라디오 하나만 주면 아파트 한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남포 유리공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초급 당비서를 만났어요. 그리고 유리를 달라고 했더니 여기 공장에는 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장 굴뚝 하나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느냐 하니까 정 그러면 나하고 함

게 갑시다. 그리고 보여 주었습니다. 판유리가 나옵니다. 저 바라 있는데 왜 안 주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시 깨지는 것입니다. 아까운데 왜 깨뜨리냐고 했더니 지금 우리는 원유난 때문에 판유리원료인 모래를 파올 수 없고 당시 갖고 있던 원료만을 사용해서 판유리를 만들어야 하니까 제대로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용광로만은 계속 가동해야 하는데 이유인즉 그것을 중단했다가 다시 가동하는 비용이 이렇게 계속 단순반복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돌린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도 그동안 UNDP 주관회담이라든가 또는 여성회담이라든가 해서 북한에 갔다 온 동료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김책 제철소도 저희 동료 연구원이 갔다 왔는데, 네개의 굴뚝 중 두개만 연기가 나오더라는 얘기였습니다.

강성화: 우선 질문했던 북한의 민주당 지지, 김대중씨 지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북한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저것은 거짓말이다, 선전이다, 악의에 찬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바라! 북한이 김대중을 지지하지 않느냐, 그 얘기는 왜 갑자기 믿게 됐는지, 그 점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저쪽에서 얘기한 것은 거짓말이라 하다가 마지막 것은 왜 진짜로 받아드렸는지, 저는 그것이 아주 Dirty Play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윤영오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물론 통일지상주의는 아닙니다만 그 비용이 얼마나 들더라도 흡수통일을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할 생각을 먼저 해야지 돈이 얼마 드느냐, 치료를 할까, 말까라는 식으로 이득을 따질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반도라는 환

자는 일단 수술하든 뭐를 하든 치료받을 수만 있다면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흡수통일이 안될 것이기 때문에 몇가지의 경험이라든가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팀스피리트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가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정보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blank check를 주었다는 얘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의 단서를 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92년에 팀스피리트 훈련을 하지 않고 93년에도 안하면 2년간을 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94년부터는 동훈련을 재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팀스피리트 훈련을 한번 하려면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항공기를 예약해야 되고 수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92년에 한번 쉬었고 93년에도 쉬면 계속 쉬는 것이지 갑자기 몇년을 쉬다가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려 한다면, 이것은 미국에서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스피리트를 재개한 것은 남북관계도 좋지만 군사전략이 더욱 더 중요하다 해서 군사전략우위의 정책을 우리정부에서 택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사회자로서 몇 말씀 드리고 끝을 낼까 합니다. 여기에 와서 세 분 발표자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민족통일연구원의 know-how가 굉장히 축적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대로 연구하신다면 가까운 장래에 미국의 RAND연구소나 Brookings연구소 못지않은 연구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이를 먹어야 뭘 아는 사람으로서 판단하고 학문이라도 할 줄 알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왔는데 오늘 이 세분 전문분야 박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드시 그렇지만

은 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 논리전개방식에 있어서나 자료를 엮어내는 것을 보니까 저희가 30대나 40대에 공부를 했을 때보다 월등히 나은 자질을 갖춘 학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마감하면서 제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한반도 내지는 남북한관계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하지 았았느냐 또는 너무 비관적인 전망을 하지 았았느냐 하는 말씀이 오고 갔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50년전에 미국의 한스 모겐소 교수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반도에는 수 백년동안에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오고 가고 했는데 묘하게도 이 한반도에서는 균형을 이루어서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대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문제는 낙관해도 좋지 았는가. 특히 이번 선거가 유종의 미를 거두었고 어느 때보다도 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출현하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상당히 호전되지 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핵문제에 대해서 김국진박사께서도 매우 심각한 염려를 했습니다만 북한이 핵을 갖느냐 았갖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우리 국내정치가 얼마만큼 안정되고 또 그런 기반위에서 경제가 얼마만큼 더 신장될 수 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신장된다면 북이 핵을 가진들 무엇을 합니까? 한 두달전에 Scalapino교수가 왔다 갔습니다만 Scalapino교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Scalapino도 역시 북한은 3년을 견디기가 어렵지 았겠느냐고 전망했다 하더군요. 저도 작년에 독일에 갔을 적에도 독일에 있는 전문가들이 북한의 체제수행능력이 생각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을 바서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남북문제를 건설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역시 우리 체제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세분 박사님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식의 결론도 도출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오늘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附錄：會議概要>

第6回 國內學術會議 —轉換期の 南北韓關係：現況과 展望—

日 時：1992年 12月 28日(月) 14：00~18：00

場 所：타워호텔 렉스룸

- 13：30~14：00 登 錄
- 14：00~14：05 開會辭：李秉龍(民族統一研究院 院長)
- 14：05~15：05 會 議：轉換期の 南北韓關係：現況과 展望
●司 會：李容弼(서울大 教授)
●發 表：吉炆宇(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美國 新行政府의 對韓半島政策 展望
 許文寧(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北韓의 對南戰略 分析 및 展望”
 朴英鎬(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南北韓關係의 現況과 展望”
- 15：05~15：20 Coffee Break
- 15：20~17：00 討 論：姜聲鶴(高麗大 教授)
 具宗書(中央日報 論說委員)
 金國振(外交安保研究院 教授)
 金基德(KBS 北韓部長)
- 17：00~18：00 다과회

轉換期的 南北韓關係：現況과 展望

세미나시리즈 92-05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7538,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3年 1月 日

發行日 1993年 1月 日
